연구보고서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정형곤 · 김병연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보고서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정형곤 · 김병연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 언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적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2년「우리식 경제관리방법」(소위 6.28조치)을 시행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자율적 경영관리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농업분야에서 협동농장 재량권 확대와 영농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개혁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개혁은 과거 동유럽 국가들이 시도했던 사회주의 체제 내의 개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 내의 개혁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한 인정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를 비롯한 시장경제 제도의 기본 요소들을 도입하지 않는 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적 초기 조건을 고려할 때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시장경제로의 과감한 전환과 이를 통한 경제체제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북한경제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므로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의 괴리로 인한 하이퍼인플레이션, 암시장에서의 환율 급등으로 인해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이 연구는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체제전환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선진국, 중진국, 저개발국, 그리고 전체 국가로 분류하여 경제 단계별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체제전환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경제 단계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론분석과 실증분석의 비교를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성장 문제를 고민하고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협력과정에서 설정해야 할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이 연구 책임을 맡고,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재완 초청연구위원, 방호경 전문연구원, 홍이경 연구원이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이재영 선임연구위원, 김준동 선임연구위원, 윤덕룡 선임연구위원과 통일부 김시운 과장, 기획재정부 나원창 과장, 한국개발연구원 이 석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장형수 교수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체제전환 연구에 대한 열기가 다소 사그라졌지만, 북한경제의 불안정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정책방향이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유도하고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1월

원장 이 일 형

국문요약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면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의 병진노선’을 내세우며 이전 정권에 비해 경제성장을 더욱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맥을 잇는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추진하여 경제개선조치를 시범실시 및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한 김정은은 2013년 이후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외자 유치를 도모하였으며, 집권 이후 국내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제성장을 위한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나, 북한이 기대하는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근본적 제도가 북한 경제성장의 1차적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체제 내 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효과적인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저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도출하고자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모두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저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을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유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제도적 여건, 인적자본, 국내투자 등과 함께 체제이행과 관련된 변수, 즉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무역·외환 시스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성장요인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찾고, 체제전환국의 사례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의 순차성을 분석하여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제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동시에 성장촉진효과가 크면서도 북한의 정치체제에는 가장 충격을 적게 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이론 및 체제전환 연구들과 비교함으로써 실증연구의 정합성을 높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순차적인 정책을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정부가 소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를 주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며, 북한의 필수 인프라 개선과 주민의 영양상태 증진을 위해서는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 중기와 후기에는 무역 및 외환거래 시스템 개선, 대규모 사유화 과정에서 기업의 평가와 매각, 기업구조조정, 경쟁촉진정책 등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발전의 초기, 중기, 후기에 각각 부응하는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전략을 '성장기반 조성 지원', '대외개발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지원', '인도적 · 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 지원', '대외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제외교 지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 관련된 연구들이 학술적 · 이론적 논거가 부족한 채로 정책

이 제안되거나 입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대북 경제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출된 경제성장 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도 정책의 순차성과 타이밍을 함께 고려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번 연구에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고, 그중에서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변수들만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북한 경제성장에 관한 정책연구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차 례

표 차례

그림 차례

부록 표 차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론: 모형과 변수
3. 연구의 흐름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북한은 1990년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다. 1990년대에는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이후 다소 회복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과 플러스 성장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침체는 여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와 같이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성, 즉 연성제약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행정가격으로 인해 재화의 희소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가격왜곡, 공유재산으로 인한 무임승차,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 혁신과 동기부여 결여 등에 기인하고 있다.[1] 북한 당국도 이러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에 들어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02년 김정일에 의해 추진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앞서 언급한 계획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조치였다. 당시 이 조치는 과거 북한의 계획가격을 현실화하고, 임금과 환율을 조정하였으며, 재정과 금융, 농업, 기업, 상업 및 유통, 대외경제관계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을 단행하였고, 기존 암시장을 공식시장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군부와 기득권층의 개혁조치에 대한 반발로 개혁을 추진해 온 박봉주 총리가 실각하였고, 이후 시장억제조치로 2010년까지 경제개혁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0년 5월에 들어서는 시장통제를 다시 완화하였고, 2011년 12월 김정은의 등장과 함께 다방면에서 과거 김정일 시대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같은 유사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

1)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 문제, 사회주의 체제 내의 개혁정책, 체제전환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정형곤(2001) 참고.

김정은은 집권 이후 2012년 4월 한 연설에서 “더 이상 북한 인민들에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의 방송매체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의 상기 발언 이후 북한 당국은 2013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을 병진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제시하였고, 경제 건설과 핵 무력의 병진노선이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고 경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정당한 노선이라고 선전하고 있다.[2)]

북한 당국은 병진노선과 함께 2012년에는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6.28조치)을 시행하면서 단절되었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6.28조치의 일환으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자율적 경영관리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3)] 농업분야에서는 협동농장의 재량권 확대와 영농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개혁조치 및 법제 개편을 추진하였고, 포전담당제와 같이 협동농장의 작업단위를 축소하였으며, 자율처분권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분조의 규모를 3~5명으로 줄이고 초과수확물에 대해서는 70 : 30 정률제 시행을 통해 70%에 대한 현물분배 등을 허용하였다.[4)] 농업부문에서의 이와 같은 개혁은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제를 실시[5)]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협동농장 말단조직의 책임자인 분

---

2) 김정은(2013),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발언. (3월 31일)

3) 『조선신보』(2013a),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 연구완성을」. (5월 15일)

4) 6.28조치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으며, 조치의 내용은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고하여 작성. KIEP가 여러 방면에 걸쳐 확인한 결과, 70 : 30 정률제에서 70%는 경작자에게 귀속되고 30%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 북한은 6.28조치 이후 분조관리제하에서 포전담당제 실시를 강조하고 있고, 국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포전을 담당하는 규모가 3~5명 혹은 4~6명으로 일반적인 한 가족의

조장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6] 앞에서 언급한 김정은 집권 이후 취해진 경제개혁조치는 2001년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달리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최근의 개혁조치가 북한 전역에서 실시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여건상 농장, 기업소 등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경제개혁 관련 규정 및 조직개편도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내각보다 당과 군이 경제사업에서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2012년부터 내각의 경제관리 권한을 강화하였고, 당과 군의 경제사업을 축소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개혁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7] 내각중심제 강화에 따라 내각부서 수가 1998년 9월 31개에서 2014년 현재 42개로 확대되었다.

김정일 시대에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함께 취해진 암시장의 공식시장화로 시장이 상업유통의 한 축으로 발전하였고, 2009년 한때 화폐개혁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시장이 통제된 적도 있었으나 2010년 5월부터 다시 시장이 허용되면서 중앙계획체제의 빈 공간을 시장부문이 보충하고 있다. 북한경제에서 공식경제보다 비공식경제 부문이 80% 이상을 차지하

수와 유사해 이것이 가족영농제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와 상반되게 KIEP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전문가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한 포전을 담당하는 수는 일반적인 한 가족의 수이나 가족인 경우 분리해 배치하기 때문에 가족영농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북한의 포전담당제가 중국식 가족영농제로 이행할 경우 상당한 식량증산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농업에 집중하는 면이 있다. 최근 몇 년간 양호한 기후조건과 더불어 분조관리제의 효율적 운영(북한 측 주장) 등으로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실제적 성과도 농업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7) 『조선신보』(2013d), 「사회주의 원칙 고수, 국가의 통일적 지도」. (5월 15일)

고 있고, 시장의 규모는 자연발생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8]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 연성예산 제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 평등분배에서 개별 실적에 따른 분배방식을 다시 강조하고 있고,[9] 공장과 기업소에서도 재투자, 근로자 복지, 성과급 등에 사용되는 기업이익 유보분의 확대와 계획 외 생산 ·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0] 특히 독립채산제의 실시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입이 있는 기업과 산업단위는 우선 반독립채산제를 실시한 후 독립채산제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다.[11] 독립채산제 도입을 위해 대형 광산이나 제철소 등이 최근 당국으로부터 자체적인 수출입 권한과 투자 유치를 비롯한 대외업무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2] 기업운영자금도 재정이 아닌 은행대출로 조달하도록 하기 위한 재정 · 금융부문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3]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대외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있다. 2013년 5월에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같은해 11월에는 13개 지방 경제개발구를

8) 정형곤, 김병언, 이 석(2012).

9) 『노동신문』(2013), 「질 제고에서 경제적 공간의 효과적 이용」. (7월 14일)

10) 공장 · 기업소 · 농장의 지배인에게 20% 범위 내의 인원 운영 자율권 및 재료구입 권한 부여, 기업수익 자율처분(재투자 · 임금지급 등) 및 자체 생산품 시장판매 허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 2004년 4월 재정법 제30조 개정, 기업소 구분 시 반독립채산제를 추가하였다.

12) 『연합뉴스』(2013), 「북한, 기업 독립채산제 전환 가속화」. (10월 10일)

13) 기관 및 기업소에 대한 대출은 중앙은행이 할 수 있었으나 「중앙은행법」 제28조(금융기관의 대부)에 의해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대출하도록 하고 기관 및 기업소에 대한 대출업무는 상업은행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상업은행법」 제23조에는 "상업은행은 거래자의 요구에 따라 경영활동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중앙은행법」 및 「상업은행법」은 사실상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문수 외(2012) 참고.

지정함으로써 대외개방 확대와 지방의 균형발전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14] 2013년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내각 직속기관인 '국가경제개발위원회'[15]와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16]를 조직한 바 있다.[17] 2014년 6월에는 무역성,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내각 산하기구로서 대외경제성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대외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18] 또한 2014년 7월에 6개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적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개혁은 과거 동유럽 국가들이 시도했던 사회주의 체제 내의 개혁에 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관리체제의 개혁은 크게 「정통사회주의」 → 「개량사회주의」 → 「시장사회주의」 → 「체제전환」 등의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19] 개량사회주의는 정통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기

14) 『조선신보』(2013b), 「신의주 시에 특수경제지대, 각 도에 13개 경제개발구」. (11월 27일)

15)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내각 직속의 중앙기관으로 특수경제지대 개발과 관련된 국가적인 전략을 작성, 각 도 경제개발구들의 대상 선정, 국가심의를 위한 준비사업, 법과 규정들에 대한 수정 보충 등 개발계획의 작성・집행을 위한 국가사업 진행.

16) 조선경제개발협회: 다른 나라의 비정부기구들, 민간급 협회나 단체들, 기업과 개별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조직으로서 국내 단위와 외국기업 연계, 투자 촉진, 연구토론회 및 투자설명회 등 특수경제지대 개발에 관한 소개・선전사업 진행.

17) 『조선신보』(2013c), 「조선 각지에 13개의 경제개발구 창설」. (12월 4일)

18) 『연합뉴스』(2014), 「北 상반기 결산··· 정치는 '변화', 경제는 '연속'」. (6월 29일)

19) 이는 정형곤(2002)에서 제시한 단계별 정의를 인용하였으며, 기타 사회주의 개혁조치의 단계와 관련하여 박형중(2003)은 '체제 내 부분적 개혁', '시장도입형 개혁' 등으로 정의하기도 하나 이 경우 또한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형곤(2002); 정형곤(2003) 참고.

개혁으로, 중앙집권화 계획경제 자체를 폐기하지 않고 그 효율성 개선을 위한 개혁단계이며, 아직은 시장을 자본주의 요소로 배격하는 단계이다. 반면 시장사회주의는 중앙집권화 계획경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암시장을 공식시장으로 인정하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확대해가는 단계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단계이다. 현재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은 김정일 시대에 추진했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이어받아 다소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개량사회주의」와 「시장사회주의」의 중간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 내의 개혁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를 비롯하여 시장경제 제도의 기본 요소들을 도입하지 않는 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2013년 정형곤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27개 체제전환국의 지난 20년간 경제개혁 성과를 우수, 양호, 미흡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이 국가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판별함수를 도출하고(discriminant function) 이 판별함수에 현재 북한의 경제적 초기 변수값을 대입하여 북한 경제개혁을 전망한 결과, 북한의 현재 정치체제와 경제적 초기 조건을 고려할 때 북한이 획기적으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는 한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같은 매우 미흡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20] 이는 결국 북한도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시장경제로의 과감한 전환과 이를 통한 경제체제 개혁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현재 북한경제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며,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의

20) Jeong, Hyung-Gon(2013), "Initial Conditions, Economic Performance, and Reform Prospects in North Korea,"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26, No. 4.

괴리로 인한 하이퍼인플레이션, 암시장에서의 환율 급등 등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 사실상 북한 당국은 경제정책을 통해 계획과 시장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고, 이러한 제도적 수단을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본 연구는 북한 당국이 처해 있는 현 상황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주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고 결국 경제성장을 어떻게 도모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즉 북한의 체제전환 방안과 이를 돕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실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시도할 당시만 해도 북한경제 및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 동안 이 연구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관심은 매우 낮아진 상태이다. 이는 현재 북한 정치체제의 경직성과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대립으로 체제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고, 동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역시 20여 년이 지나 현재는 체제전환정책이라기보다 시장경제하에서의 경제정책 이슈로 전환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경제의 불안정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한경제의 성장 및 경제개혁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협력 가능성이 보일 때 우리 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여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선진국, 중진국, 저개발국, 그리고 전체 국가로 분류하여 경제단계별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체제전환국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결정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이론분석과 실증분석의 비교를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성장 문제를 동시에 고민하면서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협력과정, 남북경협 차원에서 설정해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론: 모형과 변수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과 시스템 GMM을 이용한다. 본 연구 외에도 그동안 국가간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강건한(robust) 추정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는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할 경우 제기되는 국가간 이질성과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OLS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경우 추정치에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Islam(1995)은 국가간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 패널 추정법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

였고, 이후의 많은 연구에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정효과모형은 시간불변적인 국가간 이질성을 통제함으로써 누락변수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21] 그러나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추정할지라도 경제성장모형의 내생성(endogeneity) 및 시차종속변수로 인하여 일치추정량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Nkurunziza and Bates(2003), Dornetshumer(2007)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는 데 현재까지 가장 신뢰성 있는 추정기법으로 알려진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MM, 이하 시스템 GMM)을 이용하고자 한다. 시스템 GMM은 Arellano and Bover(1995)와 Blundell and Bond(1998)가 제안한 방법으로 수준방정식과 1차 차분 방정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하여 추정하는 방식이다. Blundell and Bond(1998)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외생적 도구변수를 찾기 어려울 경우 내생적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시스템 GMM이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추정방법이다.

다만 시스템 GMM이 내생적 도구변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개입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Lee and Kim(2009)은 고정효과모형과 시스템 GMM의 추정결과를 함께 제시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고정효과모형과 시스템 GMM의 추정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21) Wooldridge(2002).

22) Nkurunziza and Bates(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에 국한했다.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은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변수로 논의할 수 있다.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이론에서는 전통적으로 자본, 노동력, 기술진보로 경제성장을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개방도, 금융, 정부지출 등 정책적 요인, 제도, 재산권 보호, 법질서 등의 제도적 요인, 그리고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각 단계별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당국이 정책변수로 활용 가능하고 데이터로 확보 가능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 국내투자, 수출비중, 인프라, 인플레이션,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적 여건을 가지고 소득수준별(소득수준 1,000~4,000달러, 4,000~1만 2,000달러, 1만 2,000달러 이상의 OECD 회원국)로 나누어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북한경제의 성장을 위한 경제개혁이 체제전환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이 될 수 있는 체제이행 관련 변수, 즉 대규모 사유화, 소규모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가격자유화, 무역 및 외환 시스템, 경쟁정책의 변수를 함께 사용하여 분석한다.

3.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근대경제학의 경제성장론의 대표적인 모델인 Solow 모형(1956)부터 1980년대의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 그리고 최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대한 논문들을 검

토하고, 각 이론들의 장단점에 대해 평가한다. 이후 제3장과 제4장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 상세히 검토한 후, 이 연구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고정효과 분석과 시스템 GMM 기법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기법을 활용하여 소득수준을 1인당 GDP 1,000~4,000달러, 4,000~1만 2,000달러, 1만 2,000달러 이상의 OECD 회원국, 그리고 전체 국가로 구분하여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이렇게 소득구간을 나누어 분석하는 이유는 각 나라별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결정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변수들로 1인당 GDP, 인적자본, 국내투자, 수출비중, 인프라, 인플레이션율,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적 여건을 사용하였다.

제4장에서는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물론 연구방법론은 앞에서 언급한 고정효과 분석기법과 시스템 GMM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체제전환국 특유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제3장에서 분석한 일반변수와 함께 체제전환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EBRD에서 발행하고 있는 체제전환지수(transition indicator)의 세부 분류를 변수로 이용한다.

제5장은 제3장과 제4장에서 도출된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한다. 이 장에서는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전체 국가, 저소득국가, 체제전환국으로 나누어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이 저소득국가의 특성과 체제전환국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북한의 경제성장과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의 시퀀싱과 타이밍에 대해 자세히 논의한다.

제6장에서는 앞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사회주의경제에 대

한 이론과 체제전환 문헌들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평가한다. 아울러 제3장과 제4장에서 도출된 실증분석 결과를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하면서 이 연구 결과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제7장에서는 앞장들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북한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 각각 정책의 타이밍과 시퀀싱을 토대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할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장에서는 북한의 경제발전 단계를 초기, 중기, 후기로 분류하고 단계별 북한 당국이 취해야할 정책들과 시기별 발전전략에 대해서 소개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북한의 경제단계별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장인 제8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현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정책을 비교하고 본 연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언급한다.

제2장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의 문헌 검토

장기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한 경제의 생산능력(productive capacity)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평균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빈국은 부국에 비해 자원의 한계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빨리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렴가설의 예측과 달리 선진국과 후진국 간 소득수준은 일반적으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되기도 한다(Keefer and Knack 1997). 이와 같이 한 국가의 장기 경제성장의 결정요인과 국가간 경제성장의 차이는 경제성장이론이 규명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근대 경제학의 경제성장론은 Solow(1956)의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민소득은 물적자본, 노동력, 기술수준의 함수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이 변수의 증가율, 즉 투자율, 인구증가율, 기술진보의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결론은 투입요소의 한계생산 체감과 규모의 수익불변을 가정하고 기술진보는 외생적인 지식의 발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매우 제한적인 가정하에서 도출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요소 투입에 의존하는 경제는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이 가능하나 투입요소의 증가에 따라 한계생산이 체감함으로써 성장률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기술진보이다. 그러나 기술진보의 속도는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장회계분석(growth accounting analysis)에서는 기술진보를 경제성장률에서 투자율과 인구증가율을 차감한 나머지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Solow 모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지속적인 기술진보에서 찾고 있지만 어떤 요인이 지속적인 기술진보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 이후 Solow 모형에서 외생변수로 취급했던 기술진보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성장이론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이론들을 통틀어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이라고 한다. 내생적 성장이론으로는 크게 두 가지 모형이 있다. 하나는 R&D 모형으로서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인정하면서 R&D를 통해 기술진보가 내생적이고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보다 자세히 Romer(1986, 1990), P. Aghion과 P. Howitt 등에 의해 개발된 R&D 모형은 국가경제에 연구 및 개발 부문(R&D)을 재화생산부문과 함께 동시에 고려한다. 이 경우 생산함수는 한계수확체감의 성격을 지니더라도 R&D 부문의 노동과 자본 투입으로 기술수준이 상승할 수 있고 이것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Lucas (1988)의 인적자본모형(human capital model)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인 인적자본의 효율성이 교육 및 기술습득으로 인하여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생적 성장모형은 투입의 한계생산이 경제성장과 함께 체감되지 않을 수 있음을 규모의 경제(Romer 1986), 제품의 다양성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Romer 1990), 제품의 품질향상(Grossman and Helpman 1991), 인적자본의 학습효과(Lucas 1988) 등을 통해 이론화하였으며 기술진보는 경제활동에 의해 정해지는 내생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부각시켰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경제성장이론은 내생적 경제성

장이론으로 한 단계 발전하였다. 이 연구들은 기술진보를 각각 연구개발과 인적자본 투자의 함수로 이해함으로써 기술진보를 내생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발전에 기초해 Mankiw, Romer and Weil(1992)은 신고전학파 모형을 변형한 모형, 즉 투자와 인구증가율에 교육변수를 추가한 모형을 사용하여 국가간 성장회귀식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물적자본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의 대리변수로서 교육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히 비산유국과 중소득국에서는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80%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이와 같이 신고전학파와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은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에 대한 교과서적 틀을 제공하였다. 즉 물적자본(투자율)과 인적자본(교육) 두 요인은 1인당 국민소득을 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간과할 수 없는 변수가 된 것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다음 세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경제성장의 교과서적 결정요인에 추가하여 정부정책을 비롯한 다른 결정요인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추가적인 결정요인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이 무역 혹은 개방도에 관한 연구이다(Krueger 1978; Rodrik 1995; Lee 1993; Sachs and Warner 1995). 예를 들어 Sachs and Warner(1995)의 연구에 의하면 국가간 무역 혹은 개방성(openness)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국가간 교역은 생산요소 축적의 효율성 향상, 시장확대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수혜, 생산성 향상, 선진기술의 이전 촉진,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를 유발한다. 그리고 금융과 경제성장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King and Levine 1993; Levine 1997). 이들에 따르면 금융은 금융중개기관과 금융시장을 통해 자본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소득불평

등이나 부의 세대간 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금융제도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Levine(2004)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관계의 복잡성을 지적하면서 금융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발하는지에 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금융이 발전하지 않으면 실물부문의 발전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지출의 효율성과 사회기반시설의 경제성장효과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Butkiewicz and Yanikkaya(2011)는 정부의 효율성에 따라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를 소득수준과 정부의 효율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효율적인 정부일수록 더 생산적인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정부지출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국가마다 서로 다른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첫째, 정부 소비지출 혹은 경상지출(current expenditure)은 비효율적인 정부하의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효율적인 정부하의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했다. 둘째, 자본지출은 비효율적인 정부를 포함하는 모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즉 개발도상국의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효율성이 결정한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어떠한 일치한 결과도 도출되지 않았다.

Esfahani and Ramirez(2003)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서비스가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며 이 기여도는 사회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초과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들은 75개국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과 국내총생산 사이에

존재하는 내생성을 고려한 구조적 모형을 추정하였다. 또한 한 국가의 제도적 역량, 즉 신뢰성(credibility)과 정부정책의 효율성(effectiveness) 등이 사회기반시설의 성장을 통하여 경제발전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사회기반시설부문의 투자와 성과를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차별적인 경제정책을 논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Lee and Kim(2009)은 R&D와 특허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개발이, 특히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성장요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제성장에 관한 두 번째 중요한 발전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North(1971, 1990), North and Thomas (1973), Rodrik(2000), Acemoglu, Aghion and Zilibotti(2006) 등은 이 발전에 중요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North에 따르면 제도는 게임의 규칙이며, 사회규칙인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개별 경제주체들의 인센티브가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생산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려고 하기보다 비생산적인 지대추구행위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은 실증연구로 이어져왔다. 이들에 의하면 제도의 발전은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혁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제도는 경제성장의 근본 요인인 반면 신고전학파와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주장하는 물적자본, 인적자본은 제도에 의해 추동된 매개변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초기 연구인 Knack and Keefer(1995)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의 정치적 위험변수들과 BERI(Business Environment Risk Intelligence)의 부정부패변수 등을 사

용하여 이들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이후에는 계량분석에서 발생하는 내생성(endogeneity)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변수들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발전되었다.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Hall and Jones(1999)는 성장률이 아니라 1인당 GDP 수준을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첫째 이유는 국가의 이질성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60년대 이후 미국의 평균 성장률은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온두라스나 말라위와 유사하지만 이 국가들을 모두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간주하고 분석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둘째, 성장률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간 소득격차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장률이 아니라 소득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제도는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제도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성장률보다 소득수준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생산적 경제활동'과 '비생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한 후, 제도는 한 경제 내의 비생산적 활동의 총량을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도 Hall and Jones(1999)와 유사하게 성장률이 아닌 소득수준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 국가의 식민지 개척 초기, 현지 기후조건이나 질병에 의해 유럽에서 식민지로 이주한 사람들의 현지 사망률에 차이가 있는 데 주목했다. 즉 이주민 사망률이 낮은 곳에는 많은 유럽인이 이주 정착하였고 이들은 장기적으로 식민지 국가로부터 혜택을 얻기 위해 장기경제형 제도를 식민지에 이식하였다. 반면 현지 여건이 좋지 않아 사망률이 높은 곳에서는 단기착취형, 혹은 수탈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를 수립하였다는 것이

다. 그리고 제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변하는 지속성(persistence)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식민 초기에 형성된 제도가 그 당시의 정치 · 경제적 세력 분포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속성에 의해 식민지가 독립한 이후에도 그 국가의 경제성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Rodrik, Subramanian and Trebbi(2004)는 세계은행의 법질서 지표로 대표되는 제도변수, 위도로 표시되는 지리변수, 그리고 무역개방 등 세 가지 변수를 모델에 포함하고 유럽 정착인 사망률 등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제도가 성장에 가장 중요하며 지리적 변수는 제도를 통해서만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Easterly and Levine(2001)도 부존자원, 지리적 요인, 정착인 사망률을 제도의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유사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역사에 기초한 도구변수와 국가간 횡단면 분석을 사용하여 제도의 내생성을 고려하고 제도가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제도에 관한 연구는 확장추세에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제도가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제도에 포함되는 변인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뢰, 규범, 문화 등도 제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제도로 재산권(property rights)을 들고 있다(North 1990; Rodrik 2000). 그 외에도 법치, 사법권의 독립성, 관료의 질, 부패, 민주주의 등이 경제성장 회귀식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제도 관련 변수이다.

제도가 성장을 결정하는 한편 경제발전이 제도의 향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Ang(2013)은 근대 이전 시기의 긴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경제발전

이 제도의 발전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현재의 경제수준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생산기술의 농업분야 전환시기, 국가의 역사, 기술채택률, 첨단기술지역의 지리적 접근성과 유전적 유사성, 인구밀도, 그리고 1,500년대 이전 시대의 전반적인 경제발전 정도 등을 근대 이전 시기의 경제발전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국경간 대규모 이주과정에서 기술과 지식 등이 보급 및 확산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국경간 인구이동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의 일곱 가지 변수를 조정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 기술채택률과 초기의 전반적인 경제발전 정도가 제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역사의 발전으로 형성된 제도가 현재의 경제수준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경간 이주를 통해 이루어진 지식의 확산 또는 기술혁신이 제도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추세는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차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Acemoglu, Aghion, and Zilibotti (2006)는 성장유형을 투자기반형 성장과 혁신기반형 성장으로 분류한 후 전자의 경제에서는 기업과 경영자 간 관계가 장기적이며 기업과 투자의 규모도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즉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성장전략과 기업형태, 경영자와 기업의 관계 등도 변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Lee and Kim(2009)은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성장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더 구체적으로 후진국과 중진국 이상의 국가들로 분류한 장기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되려는 국가는 중등교육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 반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과 특허로 대표되

는 연구개발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의들의 함의 중 하나는 중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물적자본의 증가와 중등교육 강화에 집중하면 가능하나 선진국 진입과 그 유지를 위해서는 자본, 기술, 교육, 제도, 정책 등의 조화와 선순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Flachaire García-Peñalosa and Konte(2014)는 79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1975~2005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제도가 경제성장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치와 경제 제도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s)는 경제제도(economic institutions)와 그 외의 변수들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場)의 역할을 한다. 경제성장 과정은 두 개의 체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체제에 따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가 각각 다르다. 여기서 정치제도는 어느 국가가 어느 체제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동일한 체제에 속하는 국가간 비교분석에 의하면 경제제도가 정치제도보다 경제성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는 서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정책적 함의로 언급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일부 동아시아 국가와 같이 비록 민주주의는 미약하였지만 독재정부가 경제제도를 개선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경우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떠한 전략이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성공적일 수 있지만 경제가 성숙 단계에 이르면 그 전략이 지속적으로 성공적일 수는 없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것은 경제성장 체제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을 다룬 연구도 경제성장론은 국가별 이질성

(country heterogeneity)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Fischer, Sahay and Vegh 1998; Havrylyshyn, Izvorski and van Rooden 1998; Falcetti, Raiser and Sanfey 2002; Falcetti, Lysenko and Sanfey 2006; Kim and Pirtilla 2006). 이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 국가들의 경제성

표 2-1. 최근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결정요인		연 구	결 론
정책적 요인	무역/개방도	Sachs and Warner 1995	유의한 효과
	금융	Levine 1997, 2004	유의한 효과
	정부지출	Butkiewicz and Yanikkaya 2011	경상지출: 부정적 효과(개발도상국) 자본지출: 긍정적 효과(개발도상국)
	사회기반시설	Esfahani and Ramirez 2003	유의한 효과
제도적 요인	재산권 보호	Knack and Keefer 1995	긍정적 효과
	부 패	Mauro 1995	부정적 효과
	제 도	Hall and Jones 1999;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2001, 2002	유의한 효과
	법질서	Rodrik, Subramanian and Trebbi 2004	긍정적 효과
	근대 이전의 발전에 의해 형성된 제도	Ang 2013	유의한 효과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상이한 요인	중등교육과 제도, 그리고 고등교육과 특허	Lee and Kim 2009 (이 근, 김병연)	전자는 중진국 도약에, 후자는 선진국 진입에 유효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Flachaire, García-Peñalosa and Konte 2014	두 제도의 중요성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가변적
	체제이행국	Fischer, Sahay and Vegh 1998; Havrylyshyn, Izvorski and van Rooden 1998; Falcetti, Raiser and Sanfey 2002; Falcetti, Lysenko and Sanfey 2006; Kim and Pirtilla 2006	체제이행지수는 성장에 유의한 효과

자료: 저자 작성.

장 결정요인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 예를 들면 체제이행지수(transition index)의 유의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체제이행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다양한 방법론, 즉 2SLS나 시스템 GMM을 사용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Falcetti, Raiser and Sanfey 2002, 2006; Kim and Pirtilla 2006). 그리고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 더 구체적으로 경제적 경험이 정치적으로 투영되어 체제이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 속도가 성장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성장의 정치경제학적 채널'의 중요성도 발견된다(Kim and Pirtilla 2006).

2. 실증분석 방법론 검토

경제성장이론의 발전과 더불어 실증분석 방법론의 발전도 이루어졌다. 장기 경제성장의 추정을 위해서는 횡단면 회귀분석 혹은 패널분석이 주로 이용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이해하려는 중요한 목적은 한 국가의 특이성이 아니라 다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반적인 패턴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면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을 추정할 수 있지만 이 결과가 다른 국가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지 그 자체 결과로는 알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장기 경제성장 요인의 추정은 장기 데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동시에 경기순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횡단면 분석에서는 여러 해의 통계자료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장기 데이터를 구성하는 동시에 경기순환적인 요인을 제거하였다. 패널분석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주로 5

년간의 평균 수치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시계열 분석에서 장기 데이터를 이용하면서도 경기순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수년간의 평균 수치를 이용한다면 표본 수가 크게 감소하여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얻기 힘들 것이다.

경제성장 결정요인의 실증분석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연구는 Mankiw, Romer and Weil(1992)이다. OLS 추정법을 사용하는 Mankiw · Romer · Weil은 1960~85년 자료를 이용하고 1985년의 1인당 GDP(로그)를 종속변수로, GDP 대비 투자 비중(물적투자), 중등학교 취학률(인적자본) 등을 독립변수로 두어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Solow 성장모형의 핵심인 물적투자와 내생적 성장이론의 초점인 인적자본 모두 경제성장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정 결과가 제시하는 국가간 1인당 국민소득의 조건부 수렴률은 연 1~2% 정도였다.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OLS 추정법을 적용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추정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첫째,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어렵다. 내생성(endogeneity)은 독립변수와 잔차항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 누락변수(omitted variable),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OLS 추정법은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추정법이다. 예를 들면 투자는 성장을 유발하지만 성장이 투자를 촉진하기도 한다. 또한 성장을 많이 하면 높은 교육지출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횡단면추정법에서 역인과관계는 1인당 국민소득(혹은 성장률)이 높으면 그만큼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에 투자할 여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누락변수 오차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구체적인 예

로 동아시아는 문화적 요인 때문에 저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화적 요인은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누락변수이다. 그런데 이 누락변수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잔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생성 문제를 일으킨다. 마지막으로 횡단면 분석의 경우 측정오차도 클 수 있다. 통계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통계 수치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국가의 자료가 횡단면 회귀분석에 포함된다면 추정치의 편의가 발생하는 것이 그 사례 중 하나이다. 둘째, 국가간 이질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Mankiw · Romer · Weil의 횡단면 분석에서 국가간 이질성은 물적자본, 인적자본 값의 차이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 특히 이 중 국가간 차이가 큰 요인이 누락되어 있다면 이 이질성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정치에 편의가 존재한다.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간 이질성을 고려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대한 최근의 실증적 연구 추세가 되고 있는 만큼 국가간 이질성을 통제하기 어려운 횡단면 OLS 추정법은 분명 한계가 있다.

Islam(1995)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OLS 추정법을 적용한 Mankiw · Romer · Weil 연구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는 횡단면추정법을 대신하여 고정효과 패널추정법 사용을 제안한다. 그의 고정효과 패널추정법은 [식 2-1]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y_{it} = ry_{i,t-1} + \sum_{j=1}^{2} \beta_j x_{it}^j + \eta_t + \mu_i + \upsilon_{it} \qquad \text{[식 2-1]}$$

[식 2-1]에서 t는 연도, i는 국가를 나타낸다. 즉 y_{it} 는 t 연도, i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가리키며 x_{it}는 t 연도, i 국가의 독립변수(물적자본, 인

적자본)이다. η_t은 연도 더미를 가리키며 μ_i는 국가 더미, 즉 시간불변적(time invariant)이나 국가간 상이한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추정 회귀식에 국가 더미를 포함시킴으로써 국가간 차이가 나는 경제성장 결정요인 중 시간불변적인 요인의 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문화는 매우 점진적으로 변하는 요인으로서 거의 시간불변적이다. 고정효과 패널분석법에서는 국가 더미를 추정식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기 때문에 누락변수를 줄여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화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모든 변수들은 이와 같이 고정효과 패널분석법을 사용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하다.[23] 고정효과 패널추정법을 사용한 결과, 국가간 소득수렴 속도는 Mankiw · Romer · Weil의 1~2%보다 훨씬 낮은 0.5~0.7%로 발견되었으며 Islam은 이러한 차이는 신뢰성 있는 추정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Caselli, Esquivel and Lefort(1996)는 Islam의 고정효과 추정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차 차분 GMM(first differenced GMM)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식 2-1]은 종속변수의 1기 이전 값이 독립변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학식(dynamic equation)이다. 그런데 [식 2-1]의 최초 1기 값은 국가의 고정효과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기의 높은 1인당 국민소득(y_{i1}) 혹은 경제성장률은 해당 국가의 양질의 제

23) Islam은 추정식에 국가 더미를 포함시키는 LSDV(least squares dummy variables)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고정효과 패널분석기법의 한 종류이며 추정 결과는 within estimator와 동일하다. within estimator는 모든 변수를 주어진 국가의 기간 평균으로부터의 차이(differences) 형태로 변환시켜 추정하는 기법을 말하며 이러한 차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고정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실제 LSDV와 within estimator는 동일한 추정법이다.

도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고정효과 추정법을 사용함으로써 제도의 효과는 통제 가능하나 제도가 1기의 1인당 국민소득(y_{i1}) 혹은 경제성장률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통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내생성은 소위 도구변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차 차분 GMM에서는 y_{it-1}의 도구변수로서 그 이전의 차분 값인 (y_{it-1} - y_{it-2}), (y_{it-2} - y_{it-3}) ...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이 차분 값이 y_{it-1}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나 잔차항과 독립적이라면 도구변수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1차 차분 GMM은 고정효과기법을 동학식에 적용한 Islam의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종속변수의 전기 값이 독립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동학식에 고정효과추정법을 적용하면 추정오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Nickell(1981)이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서, 이른바 닉켈 추정오차(Nickell bias)라고 부른다. 이 추정오차는 표본 수가 증가하여도 존재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고정효과 패널추정치는 닉켈 추정오차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다.

Caselli, Esquivel and Lefort(1996)가 사용한 1차 차분 GMM의 문제점은 그 후 많은 문헌에서 제기되었다(Blundell and Bond 1998). 가장 중요한 문제는 1차 차분 도구변수는 원 변수와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소득과 같이 지속성이 높은 수준변수의 경우 금기와 전기 변수의 상관관계가 높을 가능성이 크나 금기 수준변수와 전기 차분변수의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경우 성장률, 즉 국민소득 증가율은 높으나 국민소득 수준은 낮은 반면,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증가율은 낮으나 국민소득 수준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Blundell and Bond(1998)는 이전 수준

변수와 차분변수를 적절히 사용하여 도구변수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한 GMM, 즉 시스템 GMM이 이 1차 차분 GMM이 비해 더 신뢰성이 높은 추정기법임을 주장하였다.

Bond, Hoeffler and Temple(2001)은 시스템 GMM 기법을 사용하여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추정하고 있다. 종속변수는 1인당 국민소득을 로그값으로 변환한 후, 이를 차분한 수치, 즉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독립변수로서는 Mankiw · Romer · Weil의 추정식에서 사용된 독립변수 중에서 인적자본을 제외하고 있다. 즉 Caselli · Esquivel · Lefort가 투자율뿐만 아니라 정부지출, 정치불안정 등 다양한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시도한 반면, Bond · Hoeffler · Temple은 더 간단한 성장모형을 추정하고 있다. 두 추정 결과 모두 투자율(물적자본)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은 동일하나 1인당 국민소득의 수렴 속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Caselli · Esquivel · Lefort는 수렴 속도를 연 6~10%로 제시한 반면, Bond · Hoeffler · Temple은 이를 2%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Bond · Hoeffler · Temple은 믿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렴 속도가 Caselli · Esquivel · Lefort 추정법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Lee and Kim(2009)의 연구는 Bond, Hoeffler and Temple(2001)이 이용한 시스템 GMM 추정법을 사용한 동시에 Bond · Hoeffler · Temple이 사용하지 않은 다양한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추정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Lee and Kim(2009)은 경제성장식 [식 2-2]를 추정하고 있다.

$$y_{it} = \alpha + \beta y_{i0} + \gamma \mathrm{INST}_{it} + \delta \mathrm{POL}_{it} + \lambda \mathrm{PGROW}_{it} + \rho_{it} \qquad [식\ 2\text{-}2]$$

[식 2-2]에서 t는 연도, i는 국가를 나타낸다. 즉 y_{it}는 t 연도, i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가리키며 *INST*는 제도변수, *POL*은 정책변수, *PGROW*는 인구성장률을 가리킨다. Lee and Kim(2009)은 [식 2-2]를 고정효과 패널뿐만 아니라 시스템 GMM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득수준별로 경제성장 결정요인의 중요성이 상이하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내생성의 처리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제도는 매우 점진적으로 변하고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혹은 오랜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제성장 추정방법을 사용해서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종교라는 제도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종교를 독립변수로, 경제성장을 종속변수로 삼고 회귀분석을 할 경우 누락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금기의 종교활동은 금기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교가 다른 제도에 영향을 주고 그 제도가 경제성장을 결정할 수도 있다. 또 종교가 저축과 투자 습관, 교육투자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제도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역인과관계, 즉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양질의 제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제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도구변수의 사용이 요구된다. 즉 제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성장과는 관계없

는 변수, 즉 상관성은 있으나 외생적인 변수(relevant but exogenous variable)가 타당한 도구변수인 것이다.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2001, 2002)은 제도 연구에서 도구변수 기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은 장기적으로 제도가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전 식민지 국가 64개국의 경제성장을 연구하고 있다. 독립변수인 제도변수로는 재산권의 확립 정도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 제도변수는 1인당 국민소득과 내생성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은 19세기 유럽 이주민의 사망률을 도구변수로 이용한다. 즉 유럽 이주민이 기후나 풍토 등의 영향으로 식민지에서의 사망률이 높을수록 식민지 국가에는 단기수탈형 제도를 세우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식민지에서 기록하는 사망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장기적으로 파이를 얻기 위해 발전형 제도를 이식한다는 것이다. 도구변수법을 이용한 추정 결과는 제도, 즉 재산권이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2)은 이러한 발견의 연장선상에서 식민지 국가의 '운명의 역전'은 바로 제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1500년의 도시화 정도를 독립변수로, 1995년의 1인당 GDP를 종속변수로 삼아 회귀분석하면 이 두 변수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에 제도 관련 변수(수탈 위험, 집행부 제약 정도)를 독립변수로 추가하면 1500년의 도시화 정도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식민지 국가에 이식된 제도의 질 때문에 운명의 역전이 일어나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다. 즉 1500년에 도시화가 진전된 국가에서는 수탈할 자원이 풍부하므로 유럽 이주민은 단기수탈형

제도를 세운 반면, 그 당시 도시화가 진전되지 않은 식민지 국가는 단기간에 수탈할 자원이 없으므로 장기발전형 제도를 이식했다는 것이다.

제도가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때 도구변수법이 갖는 중요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도구변수는 한 기간에 관찰된 것으로서 횡단면 OLS 추정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앞에서 지적한 횡단면 OLS 추정의 많은 문제점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 2002)의 연구에서도 제도가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확고해지기 위해서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 제도 외에 부존자원의 종류와 양 등 경제성장에 기초적인 요인들이 제도와 함께 독립변수에 포함되어 그 설명력을 두고 제도변수와 경쟁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의 제반 결정요인을 독립변수에 포함시켜 회귀분석할 경우 현재까지 가장 신뢰할 만한 추정기법은 시스템 GMM이다. 물론 점진적으로만 변하는 제도(slow moving institutions)를 다룰 때는 한계가 있지만 이에 타당한 외생적 도구변수(external instruments)를 찾기 어려울 경우 대안은 내생적 도구변수(internal instruments)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 GMM 기법이 내생적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기법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기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Blundell and Bond 1998). 그러나 시스템 GMM은 도구변수를 사용할 때 연구자가 개입할 여지가 많으므로 고정효과 패널분석기법과 시스템 GMM을 동시에 사용하여 그 결과를 중복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ee and Kim 2009). 이 보고서에서의 연구도 이러한 방법론을 따르고 있다.

제3장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1.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2. 분석자료의 출처 및 기초통계
3. 분석 결과

1.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olow(1956), Romer(1986), Lucas(1988) 등에 의해 이론적 측면에서 경제성장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경제성장이론의 발전과 함께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도 많이 시도되었다.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한 대표적 실증연구로는 제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Mankiw, Romer and Weil(1992), Levine and Renelt(1992), Barro(1996, 2003), Sala-i-Martin, Doppelhofer and Miller(2004), Petrakos, Arvanitidis and Pavleas(2007), Moral-Benito (2012)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이는 경제성장의 이론적 모형이 아직 정형화된 틀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다양한 설명변수를 통해 설명하려는 노력이 많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소득수준별로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이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각 소득수준별로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기본 추정방정식은 [식 3-1]과 같다.

$$\triangle \ln g_{it} = a + \alpha \ln g_{i,t-1} + \beta' X_{it} + v_i + v_t + \varepsilon_{it} \qquad \text{[식 3-1]}$$

[식 3-1]에서 i와 t는 각각 국가 및 연도를 의미하고, $\ln g$는 1인당 실질 국민소득에 로그를 취한 값이며, X는 전술한 투자, 인적자본, 개방(openness), 외국인직접투자, 거시경제 여건, 제도적 요인 등을 포함한다. v_i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관측되지 않는 개별국의 특성을 나타내고, v_t는 국가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관측되지 않는 시간 특성을 의미한

다. 그리고 ϵ_{it}는 독립동일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를 따르는 확률변수 $\epsilon_{kjt} \sim i.i.d.(0, \sigma_{\epsilon}^2)$를 나타낸다.

[식 3-1]에서 좌변의 종속변수는 국가별 경제성장을 나타낸다. 기존 연구에서는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또는 실질 GDP 성장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을 더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우변의 독립변수인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이는 경제성장이론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 통제변수와 함께 거시경제 안정성, 경제환경 및 기타 통제변수이다.

본 연구는 기본 통제변수로 경제성장이론에서 요구하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투자율 및 전기 1인당 소득수준을 포함하고자 한다.

인적자본은 각국의 경제성장에서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도 뒷받침되어왔다. Barro(1991), Barro and Lee (1994), OECD(2003), Barro and Sala-i-Martin(2004) 등은 인적자본의 대용변수(proxy variables)로 학교등록률(school-enrollment rate), 교육연수(years of schooling)를 사용하여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반면 Islam(1995), Caselli, Esquivel and Lefort(1996)는 인적자본(교육연수 및 학교등록률)과 경제성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부호를 보인 바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투자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경로는 직접적 및 간접적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Plossner(1992)는 국내투자가 국내 경제에서 물적자본 스톡을 증가(직접적 효과)시키거나 기술을 촉진(간접적 효과)시켜 결국 각국 경제에 정(+)의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증적 측면에서도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시

도된 바 있으며, De Long and Summers(1991), Mankiw, Romer and Weil(1992), Islam(1995), Podrecca and Carmeci(2001) 등은 이론적 예측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Easterly and Levine(2001)은 자본축적(capital accumulation)과 경제성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였다.

한편 신고전학파는 경제여건이 유사한 국가간에는 각국의 1인당 자본축적량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서로 수렴하게 되어 결국 국가간 1인당 소득수준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arro and Sala-i-Martin(2004)은 국가마다 자본스톡 할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국가간에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그들은 1인당 실질 GDP를 자본스톡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각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주로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했다. OECD(2003)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상대가격 왜곡,[24] 화폐정책의 신뢰성 저해, 조세 왜곡 및 경제행위 왜곡 등의 파급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의 경제환경을 나타내는 변수는 하드 인프라 및 제도적 인프라 여건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하드 인프라 여건의 경우 신고전파 성장모형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반면,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는 1인당 소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는 각국의 인프라 여건이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결국 경제성장에 정(+)의 파급효과

24) 다만 Driffill, Mizon and Ulph(1990)는 인플레이션과 상대가격 변동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지 못한 바 있다.

를 가지게 된다.

한편 실증적 측면에서는 Sanchez-Robles(1998), Esfahani and Ramirez (2003), Canning and Pedroni(2008) 등이 인프라와 경제성장 간에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으나 Esfahani and Ramirez(200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많은 실정이다.

제도적 변수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한 연구는 Lewis(1955)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Barro(1996), Keefer and Knack(1997), Chong and Calderon(2000), Rodrik(2000), Barro and Sala-i-Martin(2004), Kurtz and Schrank(2007) 등은 각국의 제도적 변수가 경제성장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Kurtz and Schrank(2007)는 강건한 추정치를 얻지 못한 바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제도적 변수를 다양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여 왔다. Barro(1996)는 민주주의의 대용변수로 Gastil이 구축한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지수를 이용하고 있다. Barro and Sala-i-Martin(2004)은 민주주의와 법질서(rule of law)를 구분한 후 민주주의의 경우 Freedom House의 선거권리(electoral rights), 법질서는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ICRG)에서 제공하는 rule-of-law 변수를 사용하였다. Keefer and Knack(1997)은 관료의 질(bureaucratic quality), 부패(corruption), 재산권 보호(security of property rights) 등을 통해 각국의 제도적 여건을 파악하고 있다. Chong and Calderon(2000)은 Business Environmental Risk Intelligence(BERI)에서 발표하는 contract enforceability, nationalization potential, infrastructure quality, bureaucratic delays를 사용한 바 있고,

Kurtz and Schrank(2007)는 Kaufmann, Kraay and Mastruzzi(2003)의 각국 거버넌스(governance) 지표를 대용변수로 이용하고 있다.

기타 통제변수로는 주로 무역개방과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시키고 있다. 무역개방은 각국의 비교우위 활용, 규모의 경제 등으로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성장과 무역개방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는 많은 편이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Levine and Renelt(1992), Rodriguez and Rodrik(2001), Rodrik, Subramanian and Trebbi(2004) 등은 무역개방과 경제성장 간에서 강건한 통계적 추정치를 얻지 못하였다.[25)]

한편 외국인직접투자는 기술이전, 경쟁 등의 파급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Pugel(2007) 등은 외국인직접투자와 기술의 확산효과(spillover benefits)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De Mello(1997), Choe(2003), Lensink and Morrissey(2006) 등은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본 연구의 추정방법으로는 패널분석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정효과(fixed effects) 및 확률효과(random effects) 모형을 기본적으로 이용한다. 아울러 Hausman Test를 통해 어느 추정모형이 더 우월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

25) Rodriguez and Rodrik(2001), Rodrik, Subramanian and Trebbi(2004) 등은 무역개방과 제도변수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변수를 통제할 경우 경제성장에 미치는 무역개방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은 실증적 측면에서 연구자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각 국가의 관찰되지 않는 고유효과(unobserved fixed effects) 이외에도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에서 주로 제기되는 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에 기인한다. 이러한 내생성 문제 이외에도 [식 3-1]을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값과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추정치의 일치성(consistency)을 보장하는 시스템 GMM을 이용한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Dornetshumer (2007)는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이 성장회귀분석에서 시차종속변수 및 내생성을 통제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시스템 GMM은 Arellano and Bover(1995), Blundell and Bond(1998)가 제안한 방법으로 수준방정식과 1차 차분 방정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하여 추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을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오차항의 독립과 적절한 도구변수의 선택이므로 AR 검정과 Hansen 검정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만 한다.

한편 Phillips and Sul(2003)은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파라미터 이질성(parameter heterogeneity)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Durlauf, Johnson and Temple(2005)은 같은 지역에 속하거나 개발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Petrakos, Arvanitidis and Pavleas(2007), Lee and Kim(2009)의 경우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이 각각 상이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26)]

이를 고려할 경우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소득수준에 따른 국가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제3장에서는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 이외에도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소득수준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분석자료의 출처 및 기초통계

전술한 바와 같이 [식 3-1]에서 X는 투자, 인적자본, 개방(openness), 외국인직접투자, 거시경제 여건, 제도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투자의 경우 GDP 대비 총고정자본 형성을 대용변수로 사용한다. 인적자본은 Barro and Lee(2010)에 근거하여 작성된 인적자본지수(human capital index), 개방은 GDP 대비 수출비중을 사용하고자 한다. 각국의 1인당 실질 GDP, 인적자본지수 및 개방은 Penn World Table(PWT) 8.0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한다.[27]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같이 각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인플레이션율을 대용변수(proxy variables)로 사용한다. 인플레이션율은 World Bank의 세계개발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통해 구하였다.[28]

---

26) Phillips and Sul(2003)은 패널추정 시 파라미터 이질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27) Penn World Table(PWT) version 8.0[online], http://www.rug.nl/research/ggdc/data/penn-world-table(검색일: 2014. 3. 19).

28)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online], http://databank.worldbank.org/

각국의 경제환경은 하드 인프라 및 제도적 인프라 여건을 통해 통제하고자 한다.[29] 각국의 하드 인프라 여건은 인구 100명당 전화회선(telephone lines, per 100people)을 사용한다. 외국인직접투자변수는 각국의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직접투자규모를 사용한다.

한편 제도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는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자료를 활용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각국의 제도적 환경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제도적 환경이 다양한 변수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각 변수들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증분석에서 이 변수들을 모두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요인을 주성분 분석(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변수화하고자 한다. 주성분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World Bank의 거버넌스(governance) 통계를 활용하였다.[30] 더 구체적으로 정부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법치주의(Rule of Law),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변수를 이용하였다.[31] 다만 World Bank의 거버넌스 데이터는 1996~2002년까지 2년마다 한 번씩 발표되었고, 이후부터는 매년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1997년, 1999년 및 2001년 거버넌스 데이터는 없는 실정이

---

data/views/variableSelection/selectvariable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검색일: 2014. 3. 13).

29) 이들 변수의 출처는 [표 3-2] 참고.

30)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online],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index.aspx#home(검색일: 2014. 3. 18).

31) 정부효과성은 공공서비스, 정부 정책 및 집행의 질 등과 같은 정부의 질을 나타내고, 규제의 질은 행정, 외국인투자, 경쟁적 환경 등의 규제와 관련된 지표이며, 법치주의는 법 및 제도적 장치, 부패통제는 부패 정도 및 투명성과 관련되어 있다.

다. 이에 본 연구는 1997년, 1999년 및 2001년의 경우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추계함으로써 연속된 거버넌스 데이터를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구축된 거버넌스 데이터의 주성분 분석 결과는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첫 번째 주성분(주성분 1)의 설명된 분산값이 84%의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도적 환경변수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구축한 변수의 공통된 기간은 1995~2011년이다.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가 대부분 3년 혹은 5년 평균치를 사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의 주요 변수가 각국의 경제성장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변동성이 큰 거시경제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다. 본 연구는 표본개수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평균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 6개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방법으로 도출된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표 3-1. 주성분 분석 결과

주성분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주성분 1	3.34514	2.94349	0.8363	0.8363
주성분 2	0.401655	0.264773	0.1004	0.9367
주성분 3	0.136883	0.0205643	0.0342	0.9709
주성분 4	0.116318	.	0.0291	1

자료: 저자 작성.

표 3-2. 변수들의 기초통계

변수	변수 설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출처
1인당 실질 GDP	1인당 실질 GDP(로그)	8.729	1.343	5.757	11.533	PWT 8.0
인적자본(로그)	Barro and Lee(2010)의 교육연수	0.882	0.250	0.127	1.286	PWT 8.0
투자(로그)	GDP 대비 총고정자본 형성의 비중	3.032	0.284	1.638	4.433	WDI
개방(로그)	GDP 대비 수출비중	-1.586	0.933	-5.349	1.491	PWT 8.0
인프라(로그)	전화회선(100명당)	2.241	1.678	-2.839	4.303	WDI
인플레이션율	인플레이션율	7.606	18.123	-2.782	414.012	WDI
외국인직접투자(로그)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3.111	1.044	-1.528	6.523	UN FDI
제도적 여건	거버넌스 데이터를 이용한 PCA 분석	0.383	1.789	-3.086	4.083	World Bank

자료: 저자 작성.

3. 분석 결과

가. 전체

[표 3-3]은 전 세계 125~130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실질 GDP성장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32] [표 3-3]에서 모형 (1)과 (2)는 확률효과, 모형 (3), (4) 및 (5)는 고정효과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이 중에서 모형 (1)과 (3)은 본 연구의 기본 통제변수인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수준, 인적자본 및 국내투자(GDP 대비 총고정자본 형성 비중) 변수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모형(2)와 (4)는 기본 통제변수 이외에도 거시경제 안정성(인플레이션율), 경제환경(인프라 및 제도적 여건) 및 기타 통제변수(수출비중, 외국인직접투자)를 통제한 후 추정한 결과를

32) 분석에 포함된 국가명은 [부표 1] 참고.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모형 (5)는 모형 (4)에 기간 더미를 추가적으로 통제했을 때의 분석 결과이다.

모든 추정모형에서 전기의 1인당 실질 GD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부호를 보였다. 다만 전기의 1인당 실질 GDP의 추정계수는 확률효과모형의 경우 −0.0191 및 −0.0386을 보인 반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0.2204에서 −0.2375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인적자본변수의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추정에서는 모든 방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부호를 보인 반면, 확률효과모형에서는 모두 정(+)의 부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모형 (1)에서만 나타났다. 고정효과모형에서도 기간 더미를 추가적으로 통제할 경우(모형(5)) 인적자본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투자는 모든 추정모형에서 정(+)의 부호를 보였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비중의 경우 확률효과모형에서는 부(−)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수출비중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추정할 경우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간 더미를 추가적으로 통제해도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물적 인프라는 1인당 실질 GDP 성장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인플레이션율은 1인당 실질 GDP 성장률과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변수들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가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정

표 3-3. 변수들의 기초통계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한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전체 대상국가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1)	(2)	(3)	(4)	(5)
전기의 1인당 GDP	-0.0191***	-0.0386***	-0.2375***	-0.2258***	-0.2204***
	(0.0044)	(0.0067)	(0.0211)	(0.0195)	(0.0225)
인적자본	0.0275***	0.0146	0.2753***	0.1598***	0.0902*
	(0.0104)	(0.0120)	(0.0377)	(0.0342)	(0.0500)
국내투자	0.0966***	0.0874***	0.0995***	0.0849***	0.0738***
	(0.0105)	(0.0105)	(0.0124)	(0.0119)	(0.0118)
수출비중		-0.0031		0.0356***	0.0231***
		(0.0051)		(0.0088)	(0.0087)
인프라		0.0184***		0.0225***	0.0223***
		(0.0050)		(0.0082)	(0.0081)
인플레이션율		-0.0004***		-0.0005***	-0.0005***
		(0.0001)		(0.0001)	(0.0001)
외국인직접투자		0.0013		0.0071	0.0039
		(0.0036)		(0.0054)	(0.0057)
제도적 여건		0.0037		0.0286***	0.0345***
		(0.0036)		(0.0093)	(0.0092)
기간 더미	No	No	No	NO	Yes
표본 수	770	714	770	714	714
R^2	0.135	0.164	0.219	0.277	0.335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의 부호를 보이지만 통계적 의미를 갖지는 못했다. 제도적 여건의 경우 분석방법 모두에서 정(+)의 부호를 보였으나, 확률효과모형에서는 통계적인 의미가 없는 반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 추정모형인지 파악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수행하였다.[33]

분석 결과 귀무가설[34]이 기각(chi2(13)=93.40, p값=0.000)되어 확률효과 모형보다 고정효과모형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정효과모형에서 기간 더미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간 더미에 대한 F 검정을 시도하였다. 검정 결과, 고정효과모형에서 기간 더미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표 3-3]에서 기간 더미를 통제한 고정효과 모형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5]

결국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인적자본, 국내투자, 수출비중, 인프라, 인플레이션율, 제도적 여건 변수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에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는 인적자본, 국내투자, 수출비중, 인프라와 제도적 여건 변수인 반면, 전기의 1인당 실질 GDP와 인플레이션율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추정방정식 [식 3-1]은 내생성(endogeneity) 및 시차종속변수로 인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추정하더라도 일치추정량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 문제와 개별 국가의 관찰되지 않는 고유효과, 시차종속변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GMM[36]을 이용하여 추정방정식 [식 3-1]을 추가적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4]에 제시되어 있다.

---

33) Hausmann 검정통계량(m)은 다음과 같다. $m = \hat{q}' \widehat{Var}(\hat{q})^{-1} \hat{q}$.
여기서 $\hat{q} = (\hat{\beta}_F - \widehat{\beta_R})$, $\widehat{Var}\hat{q} = Var(\hat{\beta}_F) - Var(\hat{\beta}_R)$ 이다.

34) Hausmann 검정의 귀무가설은 "개별 국가의 오차항과 설명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35) F(5, 576)=10.10(p값=0.000)이다.

36)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할 때 시스템 GMM의 장점은 Nkurunziza and Bates(2003)를 참고.

[표 3-4]에서 모형(1)은 본 연구의 기본 통제변수인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수준, 인적자본 및 국내투자(GDP 대비 총고정자본 형성 비중) 변수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모형(2)는 이 기본 통제변수 이외에도 거시경제 안정성(인플레이션율), 경제환경(인프라 및 제도적 여건) 및 기타 통제변수(수출비중, 외국인직접투자) 등을 통제한 추정 결과이다.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기본 통제변수만 추정한 모형(1)을 보면, 고

표 3-4. 시스템 GMM을 이용한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전체 대상국가

	(1)	(2)
전기의 1인당 GDP	-0.0714***	-0.3925***
	(0.0052)	(0.0512)
인적자본	0.2867***	0.2879***
	(0.0260)	(0.0939)
국내투자	0.1097***	0.0656**
	(0.0060)	(0.0300)
수출비중		-0.0013
		(0.0354)
인프라		0.1544***
		(0.0272)
인플레이션율		-0.0001
		(0.0002)
외국인직접투자		0.0112
		(0.0153)
제도적 여건		0.0996***
		(0.0187)
기간 더미	Yes	Yes
AR (2)	-3.14[0.002]	-0.89 [0.371]
Hansen	77.71 [0.062]	19.97 [0.396]
표본 수	770	714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오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표 3-3]에서 모형(3)의 분석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에 전기의 1인당 실질 GDP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인적자본 및 국내투자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아울러 이 변수들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에서 모형(2)의 분석 결과도 앞에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표 3-3]의 모형(5)와 일부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우선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변수의 경우 정(+)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하지 못했다. 아울러 다른 설명변수, 즉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인적자본, 국내투자, 인프라 및 제도적 여건 변수는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 결과와 동일한 부호를 보였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GDP 대비 수출비중과 인플레이션율은 고정효과모형과 달리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AR(2)와 Hansen 검정을 시도한 결과 오차항과 도구변수 선택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시스템 GMM을 이용한 [표 3-4] 모형 (2)의 추정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본 통제변수만 추정한 모형 (1)을 보면 AR(2)의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표 3-4] 모형 (1)의 경우 잔차항이 자기상관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해석하는 데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OECD 회원국: 고소득국

[표 3-5]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추정방정식 [식 3-1]을 이용하여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37] 다만 위에서 확률효과모형보다 기간 더미가 포함된 고정효과모형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다음에서는 고정효과모형 및 시스템 GMM의 분석 결과만 제시하고자 한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된 변수는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국내투자, GDP 대비 수출비중, 인플레이션율, 제도적 여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에서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및 인플레이션율은 부(−)의 관계를 보인 반면, 다른 변수들은 예상한 대로 정(+)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스템 GMM 추정기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인적자본, 국내투자, GDP 대비 수출비중, 인플레이션율 및 제도적 여건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적자본변수는 고정효과모형에서 정(+)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반면, 시스템 GMM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시스템 GMM을 이용한 추정에서는 인적자본변수가 국내투자 다음으로 높은 추정계수를 보였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주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국내투자, GDP

37) 본 연구는 World Bank의 분류기준에 기초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2,616달러 이상이면서 OECD 회원국인 국가(31개국)를 고소득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더 자세한 국가명은 [부표 2]를 참고하고, World Bank의 소득 분류기준은 World Bank, Country Classification[online], https://datahelpdesk.worldbank.org/knowledgebase/articles/378833-how-are-the-income-group-thresholds-determined(검색일: 2014. 3. 10) 참고.

표 3-5.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OECD 회원국(고소득국)

	고정효과	시스템 GMM
전기의 1인당 GDP	-0.3075***	-0.1059***
	(0.0303)	(0.0184)
인적자본	0.1549	0.0818*
	(0.1301)	(0.0444)
국내투자	0.1614***	0.1048***
	(0.0217)	(0.0236)
수출비중	0.1022***	0.0188*
	(0.0171)	(0.0102)
인프라	-0.0019	0.0252
	(0.0189)	(0.0161)
인플레이션율	-0.0024**	-0.0016***
	(0.0011)	(0.0005)
외국인직접투자	0.0041	0.0056
	(0.0075)	(0.0058)
제도적 여건	0.0522***	0.0137**
	(0.0109)	(0.0063)
기간 더미	포함	포함
AR (2)	-	-1.95[0.051]
Hansen	-	22.49 [0.372]
표본 수	179	179
R^2	0.814	-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오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대비 수출비중 및 제도적 여건도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플레이션율의 경우 고정효과모형 및 시스템 GMM을 이용한 모든 추정방법에서 경제성장과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고정효과모형과 시스템 GMM 모두 정(+)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 의미를 확보하

는 데 실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OECD를 대상으로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38] 즉 Lee and Kim(2009)은 고소득국가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투자와 고등교육을 지적한 바 있고, OECD(2003)는 이외에도 안정적인 거시경제(인플레이션)와 국제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AR (2)와 Hansen 검정을 시도한 결과, 오차항과 도구변수 선택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추정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 소득수준 4,000~1만 2,000달러

[표 3-6]은 실질 소득수준이 4,000달러 이상 1만 2,000달러 미만인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39]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국내투자, GDP 대비 수출비중, 하드 인프라, 인플레이션율이 경제성장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국내투자, GDP 대비 수출비중, 인프라 및 제도적 여건은 경제성장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전기의 1인당 GDP 및 인플레이션율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인적자본,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적 여건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8) 기존 연구와 본 연구 간 분석 기간과 모형이 상이하여 유사한 변수만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39) 더 자세한 국가명은 [부표 3]을 참고.

표 3-6.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소득수준 4,000~1만 2,000달러

	고정효과	시스템 GMM
전기의 1인당 GDP	-0.2675***	-0.2373***
	(0.0460)	(0.0428)
인적자본	0.0851	0.1054
	(0.2505)	(0.0909)
국내투자	0.1053***	0.3011***
	(0.0290)	(0.0264)
수출비중	0.0374*	0.0894***
	(0.0196)	(0.0224)
인프라	0.0410**	0.0650**
	(0.0179)	(0.0293)
인플레이션율	-0.0003*	-0.0001
	(0.0002)	(0.0001)
외국인직접투자	0.0071	0.0138
	(0.0117)	(0.0103)
제도적 여건	0.0362	0.0074
	(0.0220)	(0.0113)
기간 더미	포함	포함
AR (2)	-	-1.86 [0.063]
Hansen	-	14.25 [0.957]
표본 수	167	167
R^2	0.455	-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오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각 변수의 추정부호가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소득수준이 4,000~1만 2,000달러에 속하는 국가군의 경제성장에서는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국내투자, GDP 대비 수출비중, 인프라 변수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플레이션율의 경우 고정효과모형과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모두에서 인플레이션율과 경제성장 간에 부(−)의 부호를 보였으나, 시스템 GMM에서는 통계적 의미를 갖지 못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종속변수의 시차변수와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를 갖고 내생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적자본,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적 여건 변수 모두 고정효과모형과 시스템 GMM에서 정(+)의 부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변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잔차에 대한 계열상관 및 적절한 도구변수가 선택되었는지 판별하기 위해 AR (2)와 Hansen 검정을 시도하였다. 검정 결과에 따르면 추정방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소득수준 1,000~4,000달러

[표 3-7]은 실질 소득수준이 1,000달러 이상 4,000달러 미만인 국가를 대상으로 추정방정식 [식 3-1]을 이용하여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국내투자, GDP 대비 수출비중, 제도적 여건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인적자본, 인프라, 인플레이션율, 외국인직접투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국의 경우 기술집약도 수준이 낮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중요성은 기술집약도 수준이 높은 고소득국에 비해 낮을 것이다.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도 고정효과모형과 유사한

표 3-7.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소득수준 1,000~4,000달러

	고정효과	시스템 GMM
전기의 1인당 GDP	-0.2664***	-0.1988***
	(0.0474)	(0.0557)
인적자본	-0.2561	-0.1768
	(0.1859)	(0.1344)
국내투자	0.0701***	0.1640***
	(0.0247)	(0.0311)
수출비중	0.0332**	0.0363**
	(0.0150)	(0.0147)
인프라	-0.0121	-0.0066
	(0.0132)	(0.0102)
인플레이션율	-0.0003	-0.0002
	(0.0005)	(0.0002)
외국인직접투자	0.0132	0.0406***
	(0.0112)	(0.0132)
제도적 여건	0.0335**	0.0131
	(0.0138)	(0.0155)
기간 더미	포함	포함
AR (2)	-	-1.30[0.193]
Hansen	-	17.77 [0.932]
표본 수	181	181
R^2	0.455	-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오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분석대상변수 중에서 전기의 1인당 실질 GDP, 국내투자, GDP 대비 수출비중, 외국인직접투자 등이 소득수준이 1,000~4,000달러에 해당하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주요 영향을 미친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 변수들 중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는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정(+)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시스템 GMM

을 이용한 추정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득수준이 1,000~4,000 달러인 국가군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각국의 경제성장에 주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저소득국의 경우 자본이 부족하므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1,000~4,000달러로 분류되는 국가군에서는 다른 변수에 비해 국내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플레이션율이 경제성장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고정효과모형과 시스템 GMM 모두에서 통계적 의미는 갖지 못했다.

제도적 여건 변수의 경우 고정효과모형과 시스템 GMM을 이용한 추정에서 모두 정(+)의 부호를 보였다. 그러나 통계적 의미는 고정효과모형에서만 확보되었고, 시차종속변수 및 내생성을 통제한 시스템 GMM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잔차에 대한 계열상관 및 적절한 도구변수가 선택되었는지 판별하기 위해 AR (2)와 Hansen 검정을 시도하였다. 검정 결과에 따르면, 추정방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추정치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해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초등(primary), 중등(secondary), 고등(tertiary) 취학률(전기)을 인적자본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각 소득수준별로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부표 5], [부표 6] 및 [부표 7]에 각각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표 3-5], [표 3-6] 및 [표 3-7]의 추정과 거의 동일한 부호를 보였다.

제4장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1. 기존 연구 검토

1990년대에 들면서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이 시작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체제전환이 시작되었으나 이 국가들의 경제성과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그후에 많은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크게 세 가지 변수, 즉 구조개혁, 초기 조건 및 거시경제정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Sachs(1996)는 체제전환국의 구조개혁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EBRD에서 발표하는 구조개혁지수를 이용하여 1995년 및 1989~95년(평균)을 대상으로 구조개혁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두 변수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인 바 있다.

De Melo, Denizer and Gelb(1996)는 국내시장(internal markets), 해외시장(external markets), 민간부문 진입(private sector entry)으로 구성되는 자유화지수와 함께 거시경제 안정성 등의 변수를 추가적으로 통제하여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Selowsky and Martin (1997)은 De Melo, Denizer and Gelb(1996)가 사용한 자유화지수를 일부 재조정한 후,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Radulescu and Barlow(2002), Fidrmuc(2003), Lawson and Wang(2004), Falcetti, Lysenko and Sanfey(2006), Kim and Pirtilla(2006) 등은 EBRD에서 발표하는 전환지수(transition indicators)를 이용하여 구조개혁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이 중에서 Radulescu and Barlow

(2002), Lawson and Wang(2004) 등은 이 두 변수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Fidrmuc(2003)은 1990~94년 및 1991~95년 동안 EBRD 전환지수와 경제성장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Falcetti, Raiser and Sanfey(2002)의 경우 이 변수들 간에 강건한(robust)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Kim and Pirtilla(2006)는 전기까지 축적된 구조개혁은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쳤으나 금기의 구조개혁은 음의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De Melo *et al.*(2001)는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서 초기 조건에 주목한다. 그들은 초기 조건을 소득수준, 도시화율, 산업화수준, 지리적 위치, 부존자원 등 11개 변수로 정의한 후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두 개의 주성분을 도출한 후 이 변수들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개혁과 경제적 성과는 체제전환국의 초기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Havrylyshyn, Izvorski and van Rooden(1998)은 초기 조건이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에 의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경제성장에 더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Lee and Jeong(2006)은 1990~2010년간 체제전환국의 경제성과를 분석한 결과 초기 조건이 전환과정에서 추진된 경제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이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Falcetti, Raiser and Sanfey(2002)는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으로 구조개혁과 초기 조건에 주목한다. 구조개혁은 EBRD에서 발표하는 체제전환지수 중 가격자유화, 무역자유화 및 소규모 사유화(small-scale privatization)를 단순평균한 후 변수화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구

조개혁은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전반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은 기대보다 크지 않았으며 강건한(robust) 추정치도 보이지 않았다. 초기 조건은 De Melo *et al.*(2001)의 방법론에 기반하여 변수로 만들었으며, 분석 결과 EBRD 체제전환국의 경제성과에서 초기 조건의 영향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감소해왔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체제전환국의 구조개혁 및 초기 조건과 경제성과 간의 관계 또는 구조개혁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인플레이션율)과 경제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어왔다. 이는 기존 경제성장이론에서 요구하는 인적자본, 투자 등의 변수보다 체제전환국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더 본질적인 변수라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들어 단편적으로 이 변수들 이외에 FDI(Katerina, John and Athanasios 2004), 교육 및 인프라(Carvalho *et al.* 2013) 등의 변수와 체제전환국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분석모형 및 기초통계량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추정방정식은 제3장의 추정방정식 [식 3-1]에 기초하여 다음의 추정방정식 [식 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riangle \ln g_{it} = a + \alpha \ln g_{i,t-1} + \beta' X_{it} + \gamma I_{it} + v_i + \varepsilon_{it} \qquad \text{[식 4-1]}$$

[식 4-1]에서 i와 t는 각각 국가 및 연도를 의미하고, $\ln g$는 1인당 실질 국민소득에 로그를 취한 값이며, X는 제3장의 추정방정식 [식 3-1]에 사용된 변수로 투자, 인적자본, 개방(openness), 외국인직접투자, 거시경제 여건을 포함한다.

다만 [식 3-1]과 달리 [식 4-1]에서는 체제전환국의 특성을 나타내는 체제전환지수(transition indicators)가 설명변수(I_{it})로 포함되어 있다. 한편 v_i는 시간에 따라 각각 변화하지 않고 관측되지 않는 개별국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ϵ_{it}는 독립동일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를 따르는 확률변수 $\epsilon_{kjt} \sim i.i.d.(0, \sigma_\epsilon^2)$를 나타낸다.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투자, 인적자본, 개방(openness), 외국인직접투자, 거시경제 여건 변수는 제3장의 제2절에 제시한 출처와 동일하다. 특히 본 장에서 주요 관심변수인 체제전환지수는 유럽개발은행(EBRD)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40]

EBRD는 체제전환국 지수를 ① 대규모 사유화(large scale privatisation), ② 소규모 사유화(small scale privatisation), ③ 기업 지배구조 및 구조조정(이하 기업구조조정)(governance and enterprise restructuring), ④ 가격자유화(price liberalisation), ⑤ 무역 · 외환 시스템(trade and foreign exchange system), ⑥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으로 구분하여

40) EBRD는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과 시장개방을 지원하고, 국가별 체제전환 현황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체제전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구조, 기업, 외환·교역 제도, 금융제도 등을 주요 지표로 하는 체제전환지수(transition indicator)를 개발하였다(http://www.ebrd.com/pages/research/economics/data, 검색일: 2014. 4. 11).

1989년 시점부터 매년 시계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각 분야별 지수는 1~4+의 척도를 가지며 지수가 높을수록 사유화, 거버넌스, 자유화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체제전환지표의 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사유화 지표는 대규모 국영기업의 사유화 프로그램 진행 현황 등에 근거하며, 소규모 사유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사유화 여부 및 자유로운 토지거래 여부 등을 근거로 산출된다. 둘째, 기업 지배구조 및 구조조정 지표는 해당 국가의 기업법 및 파산법, 신용 및 보조금 정책, 예산제약 수준, 투자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된다. 셋째, 가격자유화지표는 정부의 가격통제 여부와 정부조달정책 등을 근거로 도출된다. 넷째, 무역 · 외환 시스템지표는 각국의 관세장벽 및 수출입쿼터제한 등의 수출입 제한조치 철폐 여부, 자유로운 외환거래 가능 여부 및 외환시장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다. 마지막으로 경쟁정책지표는 각국의 경쟁법규를 비롯한 시장진입장벽 제거 및 경쟁위반 제재조치 등을 근거로 산출된다.

각 분야별 체제전환국 지수의 기초통계는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 체제전환국 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대규모 사유화	2.590	0.991	1	4.0
소규모 사유화	3.314	1.047	1	4.3
기업구조조정	2.072	0.769	1	3.7
가격자유화	3.640	0.838	1	4.3
무역 · 외환 시스템	3.276	1.164	1	4.3
경쟁정책	2.014	0.694	1	3.7

자료: EBRD Economic Data 데이터베이스 자료(검색일: 2014. 4. 11)를 이용하여 계산.

3. 분석 결과

제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 실증모형에서 제기되는 내생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고자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고정효과모형과 시스템 GMM을 이용하고자 한다.

우선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는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추정방법에서 인적자본, 국내투자, 외국인직접투자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부호를 보였고, 전기의 1인당 실질 GDP와 인플레이션율은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과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비중과 하드 인프라 변수는 모든 추정방법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통계적 유의성은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EBRD에서 발표하는 체제전환지수를 보면 무역 · 외환 시스템 변수만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정방정식 [식 4-1]을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 내생성(endogeneity) 및 시차종속변수 등으로 인하여 일치추정량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에 제3장과 같이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추정방정식 [식 4-1]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고정효과모형의 분석결과와 차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적자본은 고정효과모형과 함께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시스템 GMM을 이용한 추정에서는 고정효과모형

표 4-2.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고정효과모형

	(1)	(2)	(3)	(4)	(5)	(6)
전기 1인당 실질 GDP	-0.4749***	-0.4587***	-0.4801***	-0.4750***	-0.4610***	-0.4981***
	(0.0506)	(0.0536)	(0.0501)	(0.0502)	(0.0492)	(0.0567)
인적자본	0.7453***	0.7103***	0.6911***	0.7423***	0.6848***	0.6717***
	(0.1803)	(0.1810)	(0.1808)	(0.1776)	(0.1751)	(0.1913)
총고정자본 형성	0.3156***	0.2942***	0.3087***	0.3106***	0.2896***	0.3052***
	(0.0585)	(0.0562)	(0.0521)	(0.0525)	(0.0521)	(0.0525)
수출비중	0.0685	0.0610	0.0594	0.0726*	0.0696*	0.0691*
	(0.0431)	(0.0415)	(0.0412)	(0.0428)	(0.0401)	(0.0411)
인플레이션율	-0.0001***	-0.0001***	-0.0001***	-0.0002***	-0.0001*	-0.0001***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인프라	0.0301	0.0258	0.0355	0.0358	0.0227	0.0372
	(0.0370)	(0.0369)	(0.0368)	(0.0384)	(0.0359)	(0.0376)
외국인직접투자	0.0565***	0.0506***	0.0435**	0.0568***	0.0465**	0.0494**
	(0.0179)	(0.0189)	(0.0204)	(0.0177)	(0.0178)	(0.0189)
대규모 사유화	-0.0077					
	(0.0335)					
소규모 사유화		0.0322				
		(0.0422)				
기업구조조정			0.0634			
			(0.0539)			
가격자유화				-0.0430		
				(0.0732)		
무역 · 외환 시스템					0.0841**	
					(0.0421)	
경쟁정책						0.0380
						(0.0414)
N	93	93	93	93	93	93
R^2	0.834	0.836	0.837	0.835	0.843	0.836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과 달리 통계적 의미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반면 국내투자변수의 경우 고정효과모형과 시스템 GMM을 이용한 모든 추정방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는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국내투자가 주요 역할을 했다는 의미이다.

인플레이션율은 통계적 유의성이 체제전환변수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였지만 고정효과모형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거의 모든 추정부호에서 부(−)의 부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비중변수는 고정효과모형과 같이 통계적 의미를 갖지는 못했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분석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인프라의 경우 고정효과모형과 같이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시스템 GMM에서는 모든 추정방법에서 통계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인프라 여건이 주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와 달리 소규모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무역 · 외환 시스템은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과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즉 중소기업의 사유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시장경제체제와 같은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국가일수록, 그리고 무역 · 외환 시스템에 제한조치가 없는 국가일수록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시스템 GMM

	(1)	(2)	(3)	(4)	(5)	(6)
전기 1인당 실질 GDP	-0.2681***	-0.2325***	-0.3463***	-0.3041***	-0.3347***	-0.2264***
	(0.0798)	(0.0658)	(0.0341)	(0.1038)	(0.0614)	(0.0396)
인적자본	0.1894	0.1947	0.3684	0.2905	0.3850	0.1948
	(0.2385)	(0.4743)	(0.2878)	(0.4055)	(0.4305)	(0.2172)
국내투자	0.3156***	0.4573***	0.5695***	0.3930***	0.3309***	0.2612***
	(0.1160)	(0.0775)	(0.1150)	(0.1089)	(0.0738)	(0.0696)
수출비중	-0.1367	-0.0442	0.0151	0.1431	0.0223	-0.0560
	(0.1425)	(0.0518)	(0.0297)	(0.1173)	(0.0773)	(0.0372)
인플레이션율	-0.0001	-0.0002***	-0.0002***	-0.0005	-0.0001	-0.0002***
	(0.0002)	(0.0000)	(0.0000)	(0.0003)	(0.0001)	(0.0000)
인프라	0.2811***	0.0269	0.0945**	0.1466**	0.2747*	0.1412***
	(0.1057)	(0.0989)	(0.0435)	(0.0658)	(0.1437)	(0.0545)
외국인직접투자	0.0993***	0.0134	0.0083	0.0053	0.0091	0.0692***
	(0.0328)	(0.0405)	(0.0264)	(0.0853)	(0.0333)	(0.0149)
대규모 사유화	-0.0438					
	(0.0511)					
소규모 사유화		0.1877***				
		(0.0480)				
기업구조조정			0.1190**			
			(0.0534)			
가격자유화				-0.1750		
				(0.1306)		
무역 · 외환 시스템					0.1037***	
					(0.0402)	
경쟁정책						0.0050
						(0.0652)
AR (2)	0.40	-0.20	-0.30	0.24	-0.09	-0.59
	[0.687]	[0.838]	[0.764]	[0.811]	[0.926]	[0.557]
Hansen	8.93	9.18	8.87	8.46	13.34	9.97
	[0.629]	[0.328]	[0.353]	[0.132]	[0.422]	[0.533]
N	93	93	93	93	93	93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오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반면 대규모 사유화, 가격자유화 및 경쟁정책은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통계적 의미를 갖지는 못하였다. 다만 경쟁정책의 경우 경제성장과 정(+)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R (2)와 Hansen 검정을 시도한 결과, 오차항과 도구변수 선택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시스템 GMM을 이용한 [표 4-3]의 추정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1]

41) [부표 8]은 추정치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해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초등(primary), 중등(secondary), 고등(tertiary) 취학률(전기)을 인적자본의 대용변수(proxy variables)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제5장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정책의 순차성

이 장의 목적은 제3장과 제4장에서 추정한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해석, 요약함과 동시에 여기서 도출된 정책의 집행순서, 즉 정책의 순차성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결론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을 그 순서와 함께 제시한다. 정책의 순차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제3장과 제4장에서 분석된 성장요인 이외에 성장에 1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책의 상호 보완성, 그리고 정치적 제약을 동시에 고려한다. 이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정책의 순차성을 구상하는 이유는 모든 성장요인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Fernandez and Rodrik 1991; Dewatripont and Roland 1992, 1996; Lau, Qian and Roland 2000).

1. 경제성장 결정요인: 요약과 해석

북한은 체제이행(대상)국과 저개발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북한 경제체제의 근간은 생산수단의 국유와 중앙계획경제를 기초로 한 사회주의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성격이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사회주의적 통제와 국유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자본주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북한 1인당 국민소득 추정치(2013년 기준, 한화 137만 원)로 판단할 때 북한은 저개발국에 속한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체제이행국과 저개발국의 경제성장 결정요

인을 중점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1]은 제3장과 제4장의 경제성장 추정 결과를 전체 대상국가, 저소득국가, 체제이행국가로 나누어 유의미한 요인을 요약하고 있다. 전체 대상국가의 결과를 저소득국가와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국한한 결과와 함께 제시하는 이유는 경제성장 단계와 국가그룹 간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국가에 대한 추정 결과는 가장 대표성이 있을 뿐만 아니

표 5-1. 경제성장 결정요인 추정 결과의 요약

	전체 대상국가		저소득국가		체제이행국가	
추정방법	고정효과	시스템 GMM	고정효과	시스템 GMM	고정효과	시스템 GMM
일반변수						
인적자본	+	+			+	
국내투자	+	+	+	+	+	+
수출비중	+		+	+		
인프라	+	+				+
인플레이션율	-				-	-
외국인직접투자				+	+	+
제도적 여건	+	+	+			
체제이행 관련 변수						
대규모 사유화						
소규모 사유화						+
기업구조조정						+
가격자유화						
무역 · 외환 시스템					+	+
경쟁정책						

주: *: +, −는 각각 긍정적, 부정적으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셀에 아무 표시가 없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변수는 모든 추정식에 포함되는 반면 체제이행 관련 변수는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추정식에만 포함된다. 그리고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회귀분석에서는 체제이행변수가 각각 하나씩 포함되므로 6개의 회귀식이 존재하며 그 결과 중 적어도 두 번 이상 유의한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 전기의 1인당 GDP는 정책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자료: [표 3-3], [표 3-4], [표 3-7], [표 4-2], [표 4-3].

라 표본 수가 증가하는 데 따른 추정의 신뢰도 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표 5-1]은 추정방법으로서 고정효과와 시스템 GMM의 결과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자의 경우 시스템 GMM을 사용할 때 흔히 범할 수 있는 도구변수 사용에서 임의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고정효과추정법이 가진 문제점인 내생성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표 5-1]에 따르면 일반변수 중 모든 회귀식에서 유의한 변수는 국내투자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의 개수로 볼 때 다음으로 인적자본(4회)이며 수출비중, 인플레이션율,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적 여건은 모두 세 추정식에서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프라도 세 추정식에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제이행 관련 변수 중 유의한 것은 GMM 추정 결과로 판단할 때 소규모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무역 · 외환 시스템이었다.

체제이행국가를 포함하여 일반변수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투자 관련 변수로는 국내투자, 외국인직접투자 등의 직접적인 변수가 포함되며 인프라도 간접적으로 투자 관련 변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내투자에 비해 인프라의 유의횟수가 낮은 이유, 특히 저개발국에서 이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저개발국에서는 인프라가 구속적 제약조건(binding constraints)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42] 저개발국의 경우 인프라 투자에 앞서 생산능력을 증가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대

42) 로드릭(Rodrik)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구속제약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일반화하기보다 각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구속제약(binding constraints)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Hausmann, Rodrik and Velasco 2005).

상 중 경제성장 제고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공장 설립이나 기계장비 등에 대한 투자일 것이다. 즉 생산해 팔 것이 있어야 이를 운반할 도로, 철도, 공항이 필요한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성장 촉진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결과이다. 체제이행국의 경우 인프라가 유의한 것은 저개발국과 달리 이 국가들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인적자본은 체제이행국가와 전체 대상국가의 고정효과추정식에서는 유의하나 저개발국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여기서 인적자본은 교육연수로 측정된다. 일반적으로 저개발국에서는 초등교육이나 문자해독률, 건강상태 등이 중등 이상의 교육보다 중요하다(Lee and Kim 2009). 그 이유는 저개발국 산업에서 필요한 직업이 고도의 숙련성이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이해할 수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한 고정효과 회귀분석에서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이유는 체제이행국가는 저개발국에 비해 평균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산업구조가 더 고도화되어 있어 숙련된 인력이나 높은 인지능력이 요구되는 직무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저개발국 수준이지만 산업구조가 체제이행국가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의 특징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 투자할 때보다 대외자본이 북한에 들어가 생산활동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도의 숙련성과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 인적자본 개발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수출비중과 인플레이션율은 저개발국과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정 결과에서 유의하다. 저개발국은 내수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성장을 견인하는 원천이 수출일 가능성이 높다. 체제이행국가는 사회주의 말기 생필품 부족현상이 심했고 체제이행 초기 가격자유화로 다수 국가에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 저감으로 대표되는 경제안정화가 체제이행기의 경제성과에서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특히 경제안정화는 체제이행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증대시킨다는 정치 · 경제학적 고려에서도 그 필요성이 더 두드러졌다.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체제이행의 경제적 혼란은 물가폭등, 환율위기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변수들이 안정되어야 투자율 제고 등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북한도 저개발국으로서 내수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적합하다. 더욱이 상대적 저임금을 기초로 한 성장전략은 한국의 경제발전에서도 매우 유효하였다. 경제안정화와 투자의 관계에서는 거시경제변수의 불확실성이 심각하다면 투자가 저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안정화는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투자는 공급을 증가시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양자는 상호 상승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제도변수는 전체 대상국가와 저소득국가에서 유의하였다. 이 제도변수는 정부효과성, 규제의 질, 법치주의, 부패통제 변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개발국의 경우 이 변수들이 성장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 반면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이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은 하나의 이유로 이보다 더 근본적인 제도 관련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유를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성장에서 1차적인 중요성을 가진 사유재산제라는 더 근본적인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North 1971, 1990; North and Thomas 1973;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2001, 2002). 사유재산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정부의 역할과 규제의 질 등이 적절히 정의될 수 있으며 법치주의, 부패통제 등이 경제성장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체제이행대상국으로 북한에도 더 중요한 제도변수는 사유재산제 등과 같이 근본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체제이행 관련 변수로 소규모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무역 · 외환 시스템은 유의한 반면, 대규모 사유화, 가격자유화, 그리고 경쟁정책은 성장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격자유화는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관련된 것으로 성장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경쟁정책도 경제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체제이행 관련 변수가 경제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소규모 사유화와 대규모 사유화의 성장효과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즉 소규모 사유화는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규모 사유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소규모 사유화는 식당, 키오스크, 소규모 사업장 및 공장 등의 사유화와 연관된 것으로 이 사유화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사유화 후 바로 생산활동이 촉진될 수 있다. 또한 지배구조 변화 등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반면 대규모 사유화는 대기업 사유화와 관련된 것으로 그 자체로 성장제고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국유기업을 사유기업으로 전환하였지만 새로운 소유주가 적절한 기업지배구조하에서 기업을 구조조정하여 효율성을

증진할 때만 경제성장 촉진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구조조정이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규모 사유화는 성장률을 직접적으로 제고하기보다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식, 즉 간접적인 방식으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Boycko and Vishny 1996).

체제이행 관련 변수 중 무역 · 외환 시스템 자유화는 무역증대효과, 거시경제 안정효과, 경쟁촉진효과 등을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화폐의 태환화, 시장경제체제에 부합되는 환율제도는 체제이행국가의 무역증대에 필수적이다. 또한 체제이행국가의 산업은 독과점구조이기 때문에 가격자유화 이후에도 독과점적인 가격 설정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환율제도가 운용되면 외국에서 소비재, 생산재의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저감될 수 있다. 소위 '경쟁의 수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해외로부터 경쟁압박효과를 받아 경쟁이 촉진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체제이행 관련 변수의 추정 결과를 북한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소규모 사유화, 대규모 사유화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의 결합, 외환과 무역자유화 등은 북한의 경제성장을 직접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가격자유화도 기업사유화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정부가 가격을 제정할 권리가 있으면 사유화된 기업의 성과는 정부의 가격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는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지대추구행위를 부추김으로써 경제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제효율성도 떨어뜨린다. 따라서 가격자유화는 기업사유화에

선행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시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역 · 외환 시스템 자유화 및 개선은 통화의 태환화, 적절한 환율제도의 운용 등과 관련된 것으로 무역을 통한 성장과 '경쟁의 수입'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북한에도 적용가능한 체제이행정책이다.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고려할 때 통계학적인 유의성뿐만 아니라 그 효과의 크기도 중요하다. 즉 하나의 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해 성장에 더 큰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를 반영하는 경제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3장과 제4장의 결과를 이용하여 경제성장 결정요인이 갖는 성장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표 5-2]는 각 요인이 한 단위의 표준편차만큼 개선될 때 그것이 가져오는 성장효과를 계산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5-2]에서는 내생성 문제 등을 고려한 결과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시스템 GMM 추정 결과를 사용하고 있다.

[표 5-2]에 따르면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 성장효과가 가장 높은 변수는 인프라, 제도적 여건, 인적자본, 국내투자 순이다. 각 요인의 성장

표 5-2. 전체 대상국가 및 저소득국가 표준계수

	전체 대상국가	저소득국가
인적자본	0.9272	-
국내투자	0.2404	0.6650
수출비중	-	0.4350
인프라	3.3424	-
인플레이션율	-	-
외국인직접투자	-	0.5571
제도적 여건	2.2993	-

주: 표준계수는 각 요인이 한 표준편차만큼 개선할 때 성장에 미치는 효과로 계산되었다.
자료: [표 3-4], [표 3-7], [표 4-3].

효과 차이도 매우 큰 편이다. 예를 들면 인프라와 제도적 여건 개선은 국내투자에 비해 각각 14배, 9.6배 가량 성장촉진효과가 있다. 인적자본 증가의 성장촉진효과도 국내투자에 비해 3.9배 높다. 그러나 추정대상을 저소득국가로 국한할 때 성장효과가 가장 큰 요인은 국내투자와 외국인투자이며 그 다음은 수출비중이다. 그리고 이 요인 사이의 성장촉진효과 차이도 크지 않다.

[표 5-3]은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정식에서 각 성장요인의 표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칸은 각 회귀식 표준계수의 평균을 구한 값이다. 이 평균값을 토대로 할 때 성장촉진효과가 가장 큰 요인은 인프라, 국내투자, 소규모 사유화의 순이다. 그 다음으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구조조정, 인플레이션율과 무역 · 외환 시스템의 순이다. 그러나 그 요인 간 성장촉진효과의 차이는 크지 않아 효과가 가장 큰 인프라와 가장 작은 무역 · 외환 시스템을 비교할 때도 전자는 후자의 2.6배인 것으로 평가된다.

표 5-3. 체제전환국 표준계수

	(1)	(2)	(3)	(4)	(5)	(6)	평균
국내투자	0.4696	0.6804	0.8473	0.5847	0.4923	0.3886	0.5772
인플레이션율		-0.3208	-0.3208			-0.3208	-0.3208
인프라	1.1351		0.3816	0.5920	1.1092	0.5702	0.7576
외국인직접투자	0.5389					0.3756	0.4573
소규모 사유화	-	0.5323	-	-	-	-	0.5323
기업구조조정	-	-	0.4481	-	-	-	0.4481
무역 · 외환 시스템	-	-	-	-	0.2946	-	0.2946

주: 표준계수는 각 요인이 한 표준편차만큼 개선할 때 성장에 미치는 효과로 계산되었다.
자료: [표 3-4], [표 3-7], [표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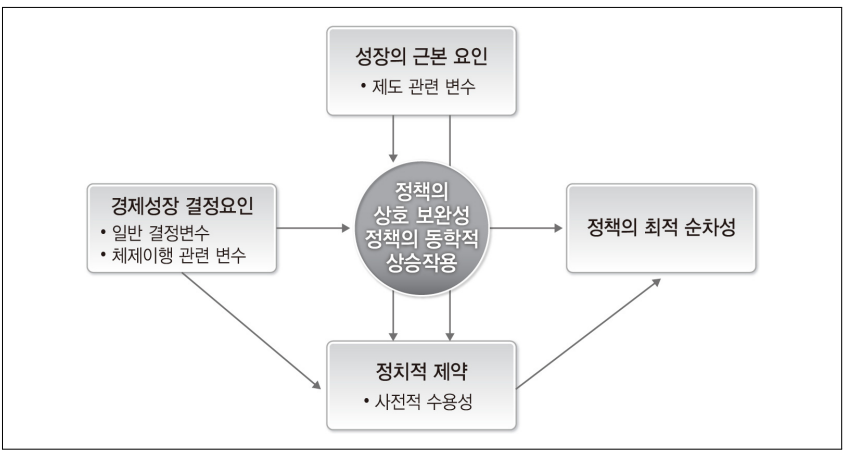
2. 경제정책의 순차성 결정의 기준

이상의 논의는 체제이행국가와 저개발국, 그리고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가 북한경제의 성장전략 구상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 결과는 경제성장 결정요인 중 일반적인 변수와 아울러 체제이행과 관련된 변수의 중요성을 동시에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개발을 위해 일반변수와 체제이행 관련 변수가 서로 상승작용하면서 경제성장을 추동하도록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 관련된 다수의 정책을 집행할 때는 전략, 우선순위 혹은 순차성이 결정되어야 한다. 체제이행에서도 급진적 혹은 점진적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Roland 2000). 즉 모든 체제이행정책을 가능한 한 동시에 그리고 단기에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은 빅뱅(Bing Bang)식 체제이행, 혹은 급진적 체제이행론자라고 불리는 반면 다수의 정책을 나누어 더 오래 순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룹은 점진주의 체제이행론자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실제 체제이행정책의 집행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이행정책을 동시에 집행하는 것이 재정자원의 제약이나 제도 미비, 정치적 이유 등으로 불가능하였다(Murrel 1995; Naughton 1996; Lau, Qian and Roland 2000). 예를 들어 급진적 사유화가 선호되더라도 그 결과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한다면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지출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국가가 이미 심각한 재정적자를 경험하고 있다면 급진적 사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또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발전되어 있지 않다면 급진적 정책 집행은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만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림 5-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정책의 순차성을 고려할 때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경제성장의 근본 요인으로 제도에 대한 고려이다. 제도는 운동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무능하거나 부패한 심판이 경기를 관장한다면 선수들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경기를 잘하는 것보다 심판을 매수하는 것이 경기를 이기기 위한 더 효과적인 길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렇게 노력할 것이다. 이는 Hall and Jones(1999)가 제시한 발견, 즉 나쁜 제도는 경제주체들이 '생산적 경제활동'보다 '비생산적 경제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게 만들 것이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제도에 관한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의 실증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정책의 상호 보완성(complementarities)과 동학적 상승작용(dynamic reinforcement)이다. 즉 A라는 정책을 시행할 때 이 정책의 효과가 나타

그림 5-1. 북한 경제성장정책의 최적 순차성 구상



자료: 저자 작성.

나기 위해서 B라는 정책의 집행이 필수적이라면 이 두 가지 정책은 상호 보완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이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집행되지 않는다면 '부분적 개혁의 함정(pitfalls of partial reforms)', 즉 정책이 긍정적 효과가 아니라 부정적 효과만 내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동학적 상호 보완성은 A라는 정책을 시행한 다음 이 정책의 결과 B라는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B정책이 집행되면 A정책이 더 강화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 예로 중국의 경우 1978년 농가책임제(household responsibility system)를 도입한 후 이를 기초로 농산물을 비롯한 가격의 쌍궤제자유화(dual track liberalization)를 시도하였으며 가격자유화가 실시된 결과 농가책임제의 효과가 더 두드러진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의 정치적 제약(political constraints)에 대한 고려이다. 경제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권력자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그 정책이 경제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권력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유권자가, 독재정권에서는 독재자가 정치적 권력자이다. 즉 경제정책을 집행할 때 정책의 궁극적인 결정자인 이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정책의 사전적 수용가능성(ex-ant acceptability)이 높아진다. 그 정책이 실행되어 승자와 패자의 분포가 달라지며 정책 결과에 대한 학습효과가 발생하면 그 동력으로 나머지 개혁을 추동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제약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훌륭한 정책이란 사전적 수용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정책이다.

[그림 5-1]은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있다. 즉 제3장과 제4장에서 분석한 경제성장 결정요인 결과를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해 정책 사이의 순차성을 정립한다. 이때 제도적 요인 중 근본적 요인은 제3장과 제4장에서 발견한 경제성장 결정요인이 작동가능한 전제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3장과 제4장에서 사용한 제도 관련 변수로서는 제도적 여건, 즉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변수가 있다. 이 변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제도변수로 사적소유권, 혹은 이와 관련된 제도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전제될 때 북한 경제성장의 다른 결정요인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다.[43] 그리고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근본 제도변수를 포함하여 모든 변수들은 정책의 상호 보완성 혹은 동학적 상승작용과 정치적 제약을 고려해 정책의 최적 순차성을 구성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앞에서 요약한 경제성장 결정요인의 효과의 크기도 고려될 것이다.

43) 이 변수들이 제3장과 제4장의 회귀분석에 직접 포함되기 어려운 이유는 근본 제도변수들, 예를 들면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이 사용한 제도변수들은 다수 국가를 포함하는 패널자료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근본 제도변수는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패널분석으로서 변수의 변이(variation)를 찾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제6장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사회주의의 비효율성과 북한 경제체제

정책 상호간의 최적 순차성(optimal sequencing)을 고려하여 북한의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는 여러 시각에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주 관심사가 장기 경제성장인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사회주의 경제의 장기 성장에 관한 문헌에 의거하여 북한경제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 국가의 장기 성장은 그 경제의 효율성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의 원인을 고찰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북한경제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의 목적은 현재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위기의 근본 요인을 이해하는 데 있다.

2000년대의 북한경제는 1990년대 중 · 후반과 같은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자생적인 성장동력이 확보된 것도 아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0~13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13%에 불과하여 경제는 정체의 늪에 빠져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난 국가는 정상상태라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1999년 6.1%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이외에 2000년대에는 −1~4% 사이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성장률에서 뚜렷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도 않다. 그야말로 그럭저럭 버티는(muddling through) 형국으로 판단된다.

북한경제가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의 성장정체를 초래한 원인과는 차별화된다. 즉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는 연성예

산제약(soft-budget constraints), 불균형(disequilibrium), 그리고 정보와 인센티브의 문제 등으로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Kornai의 주장에 의하면 정부와 기업 사이의 온정주의적 관계로 인해 연성예산제약이 발생하고 이는 기업의 행동을 왜곡시킴으로써 비효율성과 재화의 부족현상, 즉 쇼티지(shortage)를 야기한다는 것이다(Kornai 1986b, 1992).[44] 불균형학파는 소비재의 쇼티지가 발생하면 기업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 소비재 생산이 감소하여 쇼티지는 더 증가한다는 논리, 즉 쇼티지가 노동공급 감소를 통해 생산량을 떨어뜨리는 공급승수(supply multiplier)에서 그 논의를 출발시키고 있다(Portes, Quandt and Yeo 1988; Portes and Winter 1980). 그리고 정보와 인센티브의 문제를 지적한 논의 중 Weitzman(1980)에 따르면 중앙계획자와 기업 사이의 비대칭적 정보를 활용하여 경영자의 생애소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기업은 최대 가능생산량 이하를 생산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중앙정부계획이 거의 해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계획이 통제하는 범위의 기업은 특급연합기업소 등 소수 기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석기, 김석진, 김계환 2010). 그리고 부분적인 개방으로 무역, 특히 대중국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북한 내 시장화가 진전되어 비공식 경제활동이 급증하였다. 그 결과 중국에서 들여오는 소비재 등과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북한경제 내에서는 더 이상 쇼티지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중앙정부계획이 거의 붕괴되었기 때문에 중앙계획자와 기업 사이의 비대칭적 정보와 인센티브 문제를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

44) 연성예산제약은 기업 예산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정부가 세금, 대출, 가격 설정 등의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기업은 도산을 염려하지 않고 몸집만 키우려는 경영행태를 보인다.

성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논의도 관련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상의 논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인 중앙계획과 국유 중 중앙계획에 초점을 둔 논의, 즉 중앙계획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제가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현재 북한경제의 위기를 설명하는 데 그리 유용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중앙계획이 없어지더라도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와 경제활동의 국가적 규제가 계속 남아 있다면 효율성 제고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통찰이다(Brus and Laski 1989; Kornai 1986a, 1992). 더 구체적으로 Brus and Laski(1989)는 국유와 중앙계획 중 중앙계획을 포기한 시장사회주의에 대한 그들의 과도한 낙관론이 잘못임을 지적하면서 자본주의를 향한 체제이행은 자본주의의 기본 제도 중 어느 하나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제도를 패키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는 다른 사회주의 경제와는 그 규모 면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소련의 경우 1969~90년 동안 연평균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가계소득의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북한은 가계소득의 70%를 상회한다(Kim 2003; 김병연, 양문수 2012). 그 결과 1차 부

표 6-1. 사회주의의 비효율성 원인과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사회주의의 비효율성의 원인	주장 학자와 학파	북한에 대한 적용가능성
연성예산제약	Kornai	정부재정 붕괴로 강요된 분권화로 말미암아 정부와 기업의 온정주의적 관계는 거의 사라짐. 기업의 독자적 생존이 요구됨.
불균형	Portes 등	쇼티지와 노동공급을 다루고 있으나 북한에서 쇼티지는 거의 사라짐.
정보의 비대칭성	Weitzman	중앙계획이 거의 붕괴되어 중앙계획자와 기업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의 관련성이 사라짐.
국유와 관료적 통제	Kornai, Brus, North	거의 그대로 남아 있음.

자료: 저자 작성.

문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소득 중 2차 부문에서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강제저축(forced saving), 그리고 이 저축이 축적된 과잉축장화폐(monetary overhang)와 같은 문제는 북한에서 거의 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불균형학파가 주장하는 공급승수(supply multiplier)와 같은 경제 비효율성의 원인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앙계획이 거의 해체되고 쇼티지도 없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경제의 위기는 국유와 사회주의적 통제로 인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재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잔존하는, 성장을 막는 근본적인 제약은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와 사회주의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와 사회, 그리고 경제적 통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가는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 바뀌는 체제이행을 공산당과 관료적 통제를 통한 국가의 경제 개입이 없어지는 상태로 정의한 Kornai의 분석과 일맥상통하며 앞에서 언급한 Brus와 Laski의 시장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와도 맞닿아 있다(Kornai 1986a, 1992; Brus and Laski 1989). 그리고 사유재산제야말로 경제성장에서 1차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제도임을 주장한 제도경제학자 North의 논지와도 일치한다(North 1971, 1990; North and Thomas 1973).

중국의 체제이행 경험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은 소련과 달리 전 경제를 대상으로 정교한 중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제도적, 기술적 능력이 없었다. 각 성(省)에서 수립하는 중앙계획도 완성도나 집행실적 면에서 소련에 미치기 어려웠다. 한편 경제성과 면에서는 두 시기가 확연히 구분되었다. 즉 중앙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중국의 사회주의 시기에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높지 않았던 반면,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 ·

개방 정책을 편 결과 성장률이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이 개혁 · 개방 정책의 핵심은 사유권 인정이었다. 즉 집단농장을 해체하여 가족농으로 운영하면서 농업생산물의 실제 소유권이 집단농장으로부터 개별 가족농으로 옮겨갔다. 일정한 수매량만 이전 가격으로 판매한 후 남는 농업생산물은 그 가족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도 비국유기업인 향촌기업(township village enterprises)의 설립을 자유화하였다. 이러한 개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시장자유화, 즉 비공식시장에서 거래가능한 품목의 범위도 점차 넓혀갔다. 요약하면 비국유 혹은 사유권을 인정하는 개혁을 개혁 초기부터 시행하였으며 시장자유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한 것이 중국 개혁 · 개방의 핵심이었다.

2. 북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 북한 경제개혁에 주는 함의

근본적 제도가 북한 경제성장의 1차적 구속 제약이라는 앞절의 분석은 이 제도의 개선이 성장 촉발의 가장 중요한 요건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시에서 북한정권의 사전적 수용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동유럽이나 구소련의 급진적 체제이행전략은 북한정부의 관점에서는 사전적 수용가능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성장을 위한 근본적 제도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책의 성장촉진효과가 큰 반면, 북한의 정치체제에는 가장 작은 충격을 주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45)]

첫 번째, 북한의 집단농장 운영방식과 이익배분방식을 바꾸는 것은 제도변화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즉 집단농장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농장의 운영방식을 개별 가족농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집단농장의 토지를 가족에게 나누어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 중 일부는 이전 방식으로 국가가 수매하되 나머지 부분은 그 가족에게 자유처분권을 주는 것이다. 이때 수확물의 배분은 정률제보다 정량제를 적용하는 것이 인센티브 효과가 더 크다. 예를 들면 정부와 가족이 7 : 3의 비율이 아니라 정부가 이전 수매물량만큼을 계속 수매하되 나머지 수확물은 가족이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 농업개혁의 핵심인 농가책임제(household responsibility system) 방식이었으며 이 방식을 채택한 결과 중국의 농업생산량은 연 5% 이상씩 증가하였다(Brauw, Huang and Rozelle 2004). 특히 정부는 집단농장이 수매물량의 공급을 책임지도록 개별 농가가 아니라 집단농장과 계약하면 집단농장도 유지가능하면서 행정비용 부담도 줄이고 인센티브 효과도 거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단농장에 정부 수매와 개별 가족농의 수확물 배분결정권을 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 여러 집단농장 실험을 통해 정권유지 측면에서 가장 부담이 작고 생산량증가효과도 큰 배분율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제도개혁은 현재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기업재산의 개인양도를 통한 소규모 상업 혹은 기업 활동을 인정하고 나아가 이를 장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실험이 성공하면 좀 더 규모가 큰 기업활동에 대해서

45) 본고의 세 정책은 체제이행의 최소 조건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언급되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박명규 외 2010).

도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기관이나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개인들이 생겨나고 있다(김병연, 양문수 2012). 상점, 식당, 목욕탕, PC방, 당구장, 가라오케 등 서비스업체가 이 사업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장도 개인이 위탁받아 생산활동을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그 비율도 낮지 않아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김병연, 양문수(2012)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 산업공장과 중앙 공업공장 중 개인이 국가로부터 실제 운영권을 넘겨받은 공장의 비율은 2009년에 각각 23.6%와 21.4%로 나타났다. 북한정부는 이러한 개인사업을 묵인하는 현재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이를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하고 장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업 활동의 자유를 일정한 정도 이하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규모 상업 및 기업 활동의 인정만으로는 중국의 향촌기업의 사례와 같은 대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기업 활동의 자유화는 북한의 소비재와 서비스 공급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의 증가는 그 파급효과를 통해 북한 내 다른 부문의 생산활동을 자극할 수 있다. 만약 소규모 기업을 통한 정책적 실험이 성공한다면 이를 좀 더 규모가 큰 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을 증빙하고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는 북한 내 시장거래활동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이것도 현재 북한에서 성행하는 시장거래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이를 더 자유화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즉 거래제한품목을 최소화하며 거래참여자의 제한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장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활동의 경

우는 일종의 세금이나 수수료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상업활동은 간단한 등록을 하도록 하거나 아예 이런 등록도 없이 자유롭게 거래활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유재산제도 인정과 기업활동 및 시장거래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제도가 확립되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 제도가 성숙한 시장경제에서 작동되듯이 완벽한 상태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개혁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제도의 개선은 북한경제의 자생적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다음에서 다룰 정책과 결합될 때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체제이행정책의 순차성에 관해서는 이 주제에 관한 체제이행 관련 연구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Barlow and Radulescu(2005), Kim and Pirtilla(2006)는 동유럽과 구소련 체제이행국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제이행정책의 순차성을 연구하였다. Barlow and Radulescu(2005)에 따르면 소규모 사유화와 재정개혁은 초기 체제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소규모 사유화는 대규모 사유화, 무역 · 금융 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동학적 상승작용이 가장 큰 정책이었다. 그리고 재정개혁, 즉 재정건전성 개선은 대규모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그리고 무역자유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역시 체제이행 초기에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역자유화는 소규모 사유화와 금융개혁을 촉진하기 때문에 역시 초기에 시행할수록 좋은 정책이다. 특히 무역자유화와 소규모 사유화는 상호 정책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쟁정책은 다른 체제이행정책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Kim

and Pirtilla(2006)도 소규모 사유화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소규모 사유화는 기업구조조정, 대규모 사유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무역개혁도 촉진한다. 그런데 소규모 사유화는 가격자유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규모 사유화와 함께 가격자유화도 체제이행 초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금융개혁을 조기에 할 경우 이는 무역개혁과 국내경제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개혁은 체제이행 후기에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 연구는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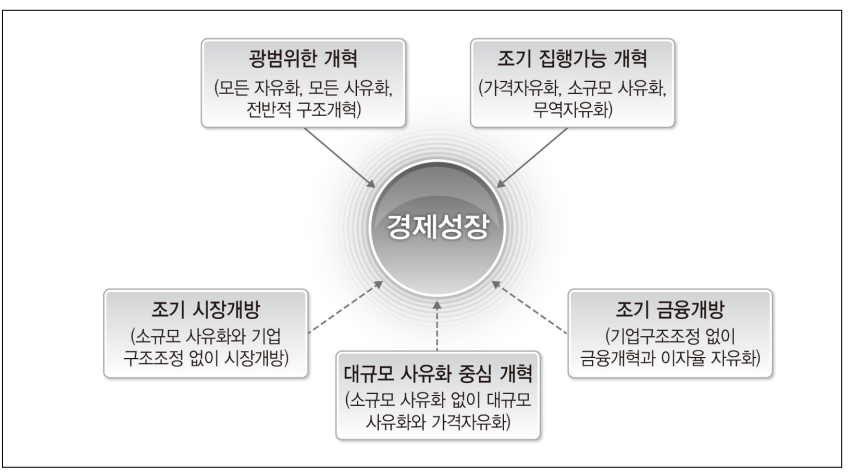
제4장의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다음의 여섯 가지 체제이행정책변수가 사용되었다. 즉 대규모 사유화, 소규모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가격자유화, 무역 · 외환 시스템, 경쟁정책이 그것이다. Barlow and Radulescu(2005), Kim and Pirtilla(2006)의 연구 결과는 이 여섯 가지 체제이행정책 중 1차적으로 집행해야 할 정책은 소규모 사유화, 가격자유화, 그리고 무역 · 외환 시스템 개혁임을 시사한다. 그 다음으로 대규모 사유화와 기업구조조정, 경쟁정책이다.

Staehr(2005)는 이러한 이행정책의 순서 혹은 조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즉 모든 체제이행정책을 동시에 집행하는 광범위한 개혁, 이 중 소규모 사유화, 가격자유화와 무역자유화를 실행하는 개혁, 즉 점진적이지만 조기에 집행가능한 개혁을 시도하는 방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조기 시장개방정책, 조기 금융개혁정책, 그리고 대규모 사유화 중심 개혁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추정하고 있다. 추정 결과, 광범위한 개혁과 조기 집행가능한 개혁은 장기적으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규모 사유화 없이 조기 시장개방이나 대규모 사유화 등만 집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등과 같은 내부 개혁 없이 금융개혁만 하는 경우에도 성장에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6-1]은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있다. 이 결과도 Barlow and Radulescu(2005), Kim and Pirtilla(2006)와 마찬가지로 가격자유화, 소규모 사유화, 그리고 무역자유화의 집행이 체제이행 초기에 이루어져야 경제성장이 제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광범위한 개혁은 장기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개혁의 정치적 제약 때문에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체제이행정책의 집행순서는 북한의 정치적 제약, 즉 사전적 수용가능성 면에서도 적합한 안으로 볼 수 있다. 소규모 사유화는 이미 제도 개선 측면에서 논의한 대로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좀 더 자유화, 공식화하는 것이다. 가격자유화도 가계지출 중 비공식시장 지

그림 6-1. 개혁정책의 순서와 조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주: 실선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점선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Staehr(2005), pp. 188-194의 추정 결과를 그림으로 표시하였다.

출이 80%에 달하는 북한의 현실을 볼 때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무역 · 외환 시스템 자유화에서 무역거래의 자유화, 북한화폐의 태환화와 적절한 환율제도의 도입은 북한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소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를 집행한 후, 즉 북한의 체제이행 의지가 확인된 후에 국제사회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대규모 사유화와 경쟁정책 도입, 기업구조조정 등은 다른 초기 정책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체제이행 후기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변수를 제고하는 정책은 크게 분류하면 투자 촉진, 인프라 개선, 인적자본 제고, 거시경제 안정화(인플레이션율), 수출비중 제고로 분류할 수 있다.[46] 이 중 투자는 다시 국내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로 나눌 수 있다. 일반변수 중 투자변수는 저소득국과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모두 유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위당 성장효과가 큰 편이어서 북한 내 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북한경제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한도 외국인직접투자를 겨냥하여 2013년 11월에 13개 중소규모의 경제개발구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조건과 경영환경문제 등을 제외하고 외국인직접투자 그 자체에 대한 북한의 사전적 수용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북한정부도 북한 내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의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주체들에 창업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앞의 소규모 사유화 논의에서 나온 것처럼 소규모 기업

46) 제도적 여건은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다룰 때 이미 검토하였으며 북한의 정치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에서 시작하여 점차 규모가 큰 기업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 내 자본이 생산활동에 투자되어 북한주민의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여 수출가능한 제품의 생산까지 이르게 될 것이며 여기서 획득한 재원은 다시 확대재생산을 위해 투자되면서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상승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법적, 제도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중국 단둥에 있는 54개의 대북 투자기업을 면담조사한 김병연, 정승호(20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북 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북한 국내정책의 잦은 변화를 들고 있다. 즉 설문조사 기업의 35.2%가 북한 국내정책의 잦은 변화를 투자 장애요인으로 답하고 있으며 투자보장제도 미비를 든 기업도 9.3%에 이른다. 즉 투자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투자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법적, 제도적 문제를 대북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정부도 외국인직접투자를 대규모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해결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개선도 저개발국에서는 성장효과가 없으나 체제이행국가에서

표 6-2. 중국 단둥에 있는 대북 투자기업의 투자 장애요인

(단위: %)

투자기업 장애요인	비율
북한 국내정책의 잦은 변화	35.2
주변국의 정책 영향	14.8
투자보장제도 미비	9.3
전기 부족	7.4
통신의 어려움	7.4
관리기관의 부패	7.4
물류의 어려움	5.5
합계	100.0

자료: 김병연, 정승호(2014).

는 성장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저개발국에 속하므로 인프라 지출에 따른 성장 제고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초기에 인프라 건설이 집중되면 임금이 올라 수출을 통한 성장전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인프라 구축은 북한 내 자본으로는 동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등 국외자본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북한의 수용성과 법적, 제도적 안전보장장치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진적 방식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의 생산능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 시기의 인프라 건설은 필수적인 운송과 물류 관련 인프라 건설로 제한한다(필수 인프라 개선). 중기에 접어들어 북한 내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단계에 접어들면 생산, 운송, 물류와 관련된 기초 인프라 투자를 증가시킨다(기초 인프라 투자). 그 이후 단계에서 북한 개혁이 완성 단계에 들어서면 공항, 철도,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북한의 생산과 수출능력을 더욱 증대시킨다(대규모 인프라 투자).

인적자본 개발은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성장촉진효과가 3배 이상 달할 정도로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리고 체제이행국가에 국한한 고정효과 회귀분석에서도 성장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개발국 대상, 그리고 체제이행국가 대상으로 한 시스템 GMM 추정 결과에서는 인적자본이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학업연수가 아닌 취학률을 사용한 회귀분석에서는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 GMM 추정 결과에서도 중등교육 취학률과 고등교육 취학률은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발견내용을 요약하면 교육투자는 저개발국이나 체제이행국가에서 단기간에 성장을 끌어올리지

는 않으나 고소득국가가 될수록 경제성장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3장의 성장회귀분석에서 저개발국도 1인당 소득이 1,000~4,000달러인 국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하의 국가들, 즉 최빈국의 경우와 달리 국민들의 영양상태나 신체적 건강상태가 심각한 국가들은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동력은 단순한 근로행위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상의 평가를 기초로 인적자본 개발과 관련된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구상할 수 있다. 초기에는 북한주민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북한의 11년 기간의 의무교육제도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47] 그리고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고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을 배분한다. 특히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중 · 후기 단계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요구하는 고숙련 근로자들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의 인적자본 개발과 관련해 북한의 사전적 수용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교육과 관련된 외부 지원에서 교육의 운영주체와 커리큘럼 등 실제적인 조건들이 협상대상이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경제안정화 변수로서 인플레이션은 체제이행국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 내 달러나 위안화 대비 환율이나 북한시장에서 형성된 쌀과 옥

47) 북한의 의무교육기간은 유치원 1년, 초등학교(인민학교) 4년, 중학교 6년을 포함하여 11년이다. 그러나 북한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학교재정이 위기를 겪게 되자 많은 학교들이 학부모들에게 학교 운영에 대한 부담을 지우게 되었다. 그 결과 학교가 요구하는 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다수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수수 가격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후반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8] 시장화로 인해 이미 상당한 가격자유화가 진행된 북한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유는 공급부족과 북한정부의 과다한 통화 발행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북한의 재정적자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49] 따라서 북한의 경제안정화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화폐 발행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 내에서 정부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채를 외국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50] 북한 국채의 외국시장 매각은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가 확인된 후, 즉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를 지나 북한이 국제사회로 편입되고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GDP 대비 수출비중은 저소득국의 경우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저개발국의 경우와 같이 내수시장이 제한된 국가에서는 수출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의미이다. 1인당 소득이 낮은 북한의 경우도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수출촉진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산업 중 가격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해 이 생산물을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산업 중 의류임가공산업은 가격경쟁력이

48) 2014년 들어 쌀과 옥수수 가격으로 평가한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49)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거의 없으며 재정은 매년 소폭 흑자이거나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에서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차입한 경우도 정부 재정수입으로 기록하였다(Kim 2002).

50) 북한 국채를 외국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시장경제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병연, 정승호 2014). 수출확대는 인플레이션 저감과 마찬가지로 북한정부도 원하는 바일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제약문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표 6-3]은 이상에서 논의한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단계별 정책을 요약하고 있다. 이 중 근본 제고변수와 체제이행 관련 변수 중 초기 정책, 즉 소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는 북한정부가 주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정책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체제이행 관련 변수 중 중기와 후기 정책은 한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무역 및 외환거래 시스템 개선에서 한국은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이외에도 외환시장 개설이나 외환제도 수립과 유지에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규모 사유화에서는 기업 평가와 매각 등을 할 때 한국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북한주민의 영양상태 증진과 북한의 필수 인프라 개선이다. 이 지원이 북한의 근본 제도 개선과 체제이행과 결합되면 그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다. 북한의 개발단계가 중기에 들어서면 한국자본의 북한 내 투자가 북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북한은 이것을 수출을 통한 성장전략과 결합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성장이 본격화될 수 있다. 또 이 시기에는 북한의 기초 인프라 구축작업이 시작되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완료되어 해외 기채를 통해 국제자본을 조달하고 북한 국채를 해외시장에서 매각할 수도 있다. 북한 경제개발 후기 단계에서는 체제이행정책 중 가장 어려운 정책, 즉 대기업 사유화와 동시에 이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경쟁촉진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책의 구상과 집행에는 상당한 노

표 6-3.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순차적 정책

기간	초기	중기	후기
근본 제도변수	• 가족농 중심의 이익배분 • 소규모 상업 · 기업 활동 인정 • 시장거래자유화	• (외국인)투자의 법적, 제도적 안정성 보장	
체제이행 관련 변수	• 소규모 사유화 • 가격자유화	• 무역 및 외환거래 시스템 개선	• 대규모 사유화 • 경쟁정책 도입 • 기업구조조정
일반변수	• 인적자본 중 주민 영양상태 개선 • 필수 인프라 개선	• 외국인직접투자 제고 • 수출을 통한 성장 • 인적자본 중 중등교육 강화 • 인플레이션 저감정책 • 재정적자의 화폐 발행 보전 지양 • 기초 인프라 투자	• 인적자본 중 고등교육 강화 •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자료: 저자 작성.

하우와 재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시기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북한은 중진국 수준에 걸맞은 인프라 수준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

1. 북한 경제발전의 단계별 우리 정부의 협력목표
2. 북한 경제발전의 단계별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

1. 북한 경제발전의 단계별 우리 정부의 협력목표

제7장은 앞 장에서 진행된 북한의 경제성장을 제고하는 요인과 정책의 순차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제7장에서는 [표 6-3]에 요약되어 있는 정책의 순차성, 즉 북한 경제발전의 초기, 중기, 후기에 각각 부응하는 우리 정부의 협력전략을 '성장기반 조성 지원', '대외개방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후기에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으로 제시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표 6-3]에 따르면 북한 경제발전 초기에는 북한의 근본 제도변수와 체제이행 관련 변수의 진전이 있는 단계이며 그 결과 북한의 자생적 성장 동력이 점화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은 북한경제의 성장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북한 경제발전의 중기에 이르면 북한 경제체제의 이행이 본격화되며 대외개방과 투자 여건이 성숙하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외개방과 수출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북한 경제발전의 후기에는 대규모 사유화를 비롯한 북한의 체제이행이 완료됨과 동시에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옮겨갈 필요성이 제기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의 북한경제 지원도 북한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가. 초기: 성장기반 조성 지원

초기 단계는 북한이 현재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단계로 상정하였다. 북한정권이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

양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이러한 시도가 북한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단계이다. 이 시기는 북한 핵문제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단계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유지되는 가운데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등을 위한 자체적인 대외정책이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초기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현재의 경제체제 및 국제적 경제고립 속에서도 최소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및 협력을 하는 단계이다.

나. 중기: 대외개방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중기에는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도모하도록 자본주의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지원하고 최소한 비핵화 과정에 진입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소되면서 실질적인 경제개방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단계로 가정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기반을 만들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경제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통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시장 성장을 기반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의 경우도 양질의 노동력과 환율에 의한 가격경쟁력을 토대로 수출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 정부의 지원이란 우리가 산업화 단계에서 추진했던 다양한 대외개방정책 경험을 전수하고, 수출지향적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재원, 그리고 한국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후기: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후기에는 남북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할 통합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이미 북한이 상당 부분 시장경제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중기에서 미루어왔던 대규모 사유화가 추진되는 단계이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달러를 넘어서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력 양성,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이 동반되어야 하며,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단계로 가정한다.

2. 북한 경제발전의 단계별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

본 절은 우리 정부의 세 가지 협력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동호 외(2002)가 제시한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세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첫째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지원이고, 둘째는 인도적 · 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 지원이며, 셋째는 대외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제외교 지원이다. 이를 [표 6-3]의 북한 경제성장을 위한 순차적 정책변수와 관련하여 설명하면, 근본 제도변수나 체제이행변수와 같이 북한 자신의 결정이 중요한 성장요인은 우리 정부의 간접적인 경제정책 지원과 연계시킨다. 반면 일반성장변수와 같이 한국이 직접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인적자본 및 물적자본 투자 지원을 위한 경제협력 지원, 그리고 양자 및 다자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외교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7-1]에 이를 요약 정리하였다.

표 7-1.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3대 협력방안

주: 음영은 [표 6-3]이 제시한 순차적 성장전략과 연계된 협력방안, 음영이 없는 박스는 [표 6-3]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협력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자료: [표 6-3]을 바탕으로 저자 구성.

가. 경제정책 지원방안

1) 초기: 제3국을 통해 지식공유사업을 통한 우회적 지원 및 남북 당국자간 정책협의회 구성

초기에는 분조관리제가 가족농 중심의 이익분배제도로 변화하고 소규모 상업 · 기업 활동이 인정되고 시장거래가 더욱 확대되는 단계이다. 또한 가격자유화 및 소규모 사유화가 실행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 자신이 실행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은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북한경제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제도 도입이나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자문 혹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자문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초기 단계에서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3국을 통한 지식공유사업[51]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체제이행 전 단계인 초기부터 남북 당국자간 경협사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 협력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기 이후에 소유권의 사유화나 가격자유화 등 체제이행에 따른 불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남북 당국자간 협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가칭 '북한경제정책협의회'(현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로 부총리급으로 구성)를 구성하여 남북간 경제협력은 물론 거시경제정책 안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 협의회는 과거에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인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한 우리 정부의 정책경험을 통해 북한의 수출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나아가 가격자유화 등의 부작용으로 현재의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거시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 중기 이후: 북한대외경제연구원 설립 지원

중기부터는 북한경제가 공식적인 체제이행 선언을 한 이후의 단계이기

5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2004년 이후 재정경제부가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문사업이다.

때문에 초기 체제이행제도 운영과 관련된 단순한 자문보다 체계화된 체제이행 관련 전문연구나 정책연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북한 내에 가칭 '북한대외경제연구원'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한국이 수출지향적인 산업 육성과 대외개방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것처럼 북한지역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체제이행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 연구원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물론 부족한 전문연구인력 교류를 추진하고 이 연구원이 전 세계 각국의 전문연구기관과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체제이행 시 파급효과가 큰 무역 및 외환 시스템 도입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전수하고 체제이행국가의 경험도 전수받을 수 있도록 국제협력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소통하는 협력창구 역할을 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경제협력 지원방안

1) 인적자본 투자 지원방안

가) 초기: 주민 영양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

초기 성장기반 조성지원을 위해서는 인적자본 투자 지원을 위한 기초적 지원인 주민 영양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중요하다. 이는 제3장과 제4장의 실증분석에서 도출되고 제6장의 경제성장을 위한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성장변수 중 '인적자본인 주민 영양개선 지원'과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은 인도적 지원은 남북통일시대를 이끌 미래주역인 북한 청소년 계층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들의 영양 및 위생 향상을 통해 남북통일에 따른 통일한국의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

은 물론 미래 인적자원의 기초역량을 함양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만 이와 같은 인도적 지원은 한국뿐만 아니라 UN과 같은 국제기구 또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같은 국제 NGO 등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52] 임강택 외(2008)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세 가지 부분[53] 중에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른 공여국이나 공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업중복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막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나) 중기: 북한 의무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 등 중등교육 강화 지원

중기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수출산업 육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숙련노동자 공급을 위해 기본적으로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질을 제고

52) 임강택 외(2008), p. 43: 원조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서 "국제사회의 대외원조가 어떤 나라에서는 효과가 있었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

53) 임강택 외(2008), p. 85: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하면서 "첫째, 경제개발과 관련된 개혁·개방 정책을 실천하는 북한 내부의 추진의지 및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둘째, 북한 자체의 경제발전전략 수립작업을 지원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여국가 및 공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셋째, 공여국 및 공여기관 사이의 대북 지원프로그램 선정 및 추진방식을 잘 조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앞서 실증분석에서 여러 번 언급된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낮은 경제단계에서는 단순노동력이 중요하나 경제성장과 함께 기술인력과 숙련된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진다. 따라서 중기부터는 우리 정부가 직접 북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시도하고, 북한의 낙후된 의무교육시설을 개선하고 수출산업과 연관된 직업교육시설을 마련하는 등 인적자본으로서 중등교육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후기: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

후기에는 우리 정부의 북한 지원전략인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에 따라 북한의 산업고도화에 요구되는 고급연구인력(석박사)을 공급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제3장 실증분석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분석대상국 전체, 그리고 소득수준 1만 2,000달러 이상 고소득국가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 고등교육을 받은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 중등교육은 상대적으로 현 소득수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고등교육은 뒤떨어져 산업고도화를 추진해야 하는 후기에 고도화된 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54]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낙후된 고등교육

54) 김석진(2012), 제2장 「북한산업의 발전잠재력과 정책과제」, 김두얼 편(2012), 『남북한 경제통합연구: 북한경제의 장기발전전략』, pp. 63~64: "1972년 이후 11년 의무교육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성인인구의 대부분은 현대적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처럼 소득수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것은 구 사회주의국가들의 특징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경우 대학교육은 선진국이나 중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어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의 규모와 질은 미흡할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설명하였다.

시설 투자 지원 내지 운영은 물론 북한의 중등 · 고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이나 교사 · 교수요원 지원 등을 통해 필요한 고급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남북경제통합에 따른 남북간 교육제도의 의무교육연수 등 양적인 차이는 물론 질적인 차이도 모두 축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 또는 해외의 우수 고등교육기관들이 그 운영경험을 살려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유용한 수단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2) 물적자본 투자 지원방안

가) 경제특구 지원방안

- 초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북한의 초기 성장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경제특구 지원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무엇보다 긴요하다. 북한 노동력의 비교우위[55]를 활용해 정체된 남북경협으로 북한의 대중국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 및 기술력에 비교우위가 있는 한국과 펼치는 경제협력사업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조치로 개성공단 외 남북경협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고, 개성공단의 개선방안 마련도 더딘 상황이다.[56] 개성공단이 그동안 남북경협의 상징이 되어왔고 최근에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활발히 논의되고

55) 정형곤 외(2011), p. 206: 중국의 평균 최저임금 수준의 38%에 불과한 낮은 최저임금, 양질의 교육수준, 높은 기술숙련도, 언어장벽 부재, 낮은 이직가능성을 북한 노동력의 비교우위로 언급하였다.

56) 정형곤 외(2011), p. 213: "북한 당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남북관계 개선이 지연되고 경제협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있어 개성공단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한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정치 · 안보 불안 완화, 통행 · 통관 · 통신 등 3통 문제의 해결 등 개성공단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 *중기: 개성공단의 전 · 후방 연관효과 제고 및 개성 이외의 경제특별구 지원*

중기에 경제특별구 지원환경은 우선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고 미국 중심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서방의 대북 경제협력이 증가하는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성공단도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남북한 기업간에 전 · 후방 연관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지원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개성공단이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부품공급업체들과 연계(후방연관효과)됨은 물론 최종 상품을 한국시장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시장에도 공급(전방연관효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 내부의 수출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연관효과를 배가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이 북한의 대외 수출산업기지를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경제특별구' 등으로 우리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제2의 개성공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특별구는 남북한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비교우위지역이자 북한경제를 위한 수출산업 육성기지와 연계된 곳이 선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동북아 지역의 북방 3각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나진 또는 신의주 지역 경제특별구를 제2의 개성공단지역으

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개성 이외의 지역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치적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남북간 신뢰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한국과 거리가 먼 경제특별구가 선택될 경우에는 한국과 연계된 인프라 활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제특별구와 관련된 물류망 · 에너지망 등 관련 인프라 투자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후기: 개성공단 산업고도화 지원*

후기에는 북한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개성공단 산업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임금 노동력 중심의 업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향후에는 IT 등 첨단산업 기술업종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북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우리 정부가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나) 인프라 투자 지원방안

이상준(2012)은 북한의 인프라인 철도, 도로, 수력발전과 항만 시설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 개발된 것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경제위기 심화로 인프라 투자 자체가 크게 부족해져 북한의 인프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과거 중국이나 베트남 등이 체제전환 이후 대서방국가들과 진행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이나 항만 시설들을 개발했고 도로망의 현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협력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57] 더불어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결국 통일한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이며 대북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기업들의 수익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대북 인프라 투자 참여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이 아닌 경제적 타당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투자 회임기간이 긴 인프라 투자 재원조달과 추진체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 과거와 같은 '퍼주기식'이 아닌 '호혜적 교류 · 협력' 원칙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상호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58] 이와 같은 '호혜적 교류 · 협력'을 위한 좋은 예는 2014년 3월 드레스덴 구상[59]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원대가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참여를 보장받는 것이다. 그래야만 북한의 인프라 투자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안팎의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초기: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 투자 지원 및 북방 3각협력 추진*

초기에는 북한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교통, 물류 등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이는 순차적 북한 경제성장정책으로 제시된 북한의 필수 인프라 투자를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제한

57) 이상준(2012), 제4장 「북한의 경제발전과 기반시설 개발과제」, 김두얼 편(2012),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장기발전전략』, pp. 169~170.

58) 이상준(2012), p. 193.

59) 통일부 홈페이지. 「대통령,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발표(드레스덴)」,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56&mode=view&cid=11861(검색일: 2014. 4. 15),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선언)」에서 3대 대북 제의 중 민생 인프라 구축 지원방안 중 하나로 '교통, 물류 등 인프라 투자 지원'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였다.

된 재원 및 물적 기반을 감안해 북한 내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산업입지나 전력 · 통신 등 산업인프라를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이같이 북한의 성장기반 조성을 도모하는 특정 지역은 동시에 북한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과 일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배후지역에 개성공단 관련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원활한 식량공급을 위해 '복합농촌단지' 건설[60]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의 성장기반을 한국의존적이며 주변지역과 괴리된 폐쇄적 구조에서 남북이 함께 마련해 주변지역과 소통해가는 구조로 전환해가는 것이다.

또한 북방 3각협력을 통해 북방지역에 인접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북 투자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당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깊은 신뢰가 없으면 본격적인 북방 3각협력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북방 인접국들의 대북한 투자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 한 예로 북 · 러가 개발 중인 나진 · 하산 지역의 물류협력사업에 우리 정부가 다시 참여를 추진했다.

- *중기: 개성 이외 경제특별구로 투자 지원 확대 및 남북 연계 인프라 투자*

중기에는 북한의 수출산업 육성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경제특별구 투자 지원을 기존 개성공단 이외의 경제특별구(일종의 제2의 개성공단)로 확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경제특별구와 한국을 연계하는 교통망 ·

60) 통일부 홈페이지(검색일: 2014. 4. 15): 3대 대북 제의 중 민생 인프라 구축 지원방안 중 하나로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제안하였다.

에너지망 등에 대한 기초 인프라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북 연계 도로시설이나 철도, 항만, 또는 한국의 기존 발전소나 송전망 시설을 통해 북한 경제특별구까지 연계하는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협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와 제품수송, 전력 및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내부의 경제특별구간 연계를 제고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 투자 지원 등도 추진해나가야 한다.

- *후기: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후기에는 북한이 제도통합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겠지만 이것은 한국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한 북한 개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프라 투자 지원을 통해 단순히 북한 경제재건 차원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경제교류협력 확대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를 한반도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관련국들과 이 지역의 개발방향에 대한 논의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개발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역내 안전보장체계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다. 경제외교 지원방안

우리 정부의 경제외교 지원을 통한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은 북한정부가 비핵화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할 만한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만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가능하게 하며 그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본격적인 자금 지원이 공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초기: 개성공단의 국제투자 유치 지원

초기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 단계로 아직 국제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상태로 간주되는 시기이다. 순차적 성장을 위해 초기에 요구되는 외국인직접투자 등과 같은 국제투자 유치를 양자협력 중심으로 지원해나가야 한다. 그것은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남한기피증[61]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이와 같은 태도를 감안하면 초기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공동 국제투자 유치 지원만 가능할 뿐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2) 중기: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및 북한개발지원그룹 구축, 대북한 양자 국제투자 유치 지원 강화

중기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초기 단계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협력해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장

61) 장형수, 김석진, 임을출(2012), p. 27: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시 북한이 남북한 직접대화를 회피하고 다자간 협력체가 전면에 나서 북한과 대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북한의 남한기피증이다”라고 설명하였다.

형수, 김석진, 임을출(2012)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개발과 지원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체로 가칭 '북한개발지원그룹'[62]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의 연구대로 이 그룹은 '북한과 정기적인 정책 협의 및 북한 개발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재원 조달을 주도하며 원조공여자간 원조 조정 및 조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과정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을 통해 북한신탁기금 조성 등에 대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북한이 불량국가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 외국인직접투자 등의 국제투자 유치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민병원, 조동준, 김치욱 2010). 나아가 이를 통해 개성공단은 물론 개성 이외의 지역들에 대한 외국인투자 같은 국제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자적 공적개발원조자금을 투자자금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형수(200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 대한 양자적 공적개발원조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EU 등에 불과하다. 다자간 국제협력이 양자간 국제협력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 다자간 국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전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필요가 있는 분야다.

---

62) 장형수, 김석진, 임을출(2012), pp. 33~34: 다자간 국제협력체에 대한 기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북한개발지원그룹'을 제안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을 주축으로 시작하되 단계적으로 EU, 호주, 캐나다 등 북한에 대한 주요 원조국은 물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 기구 등 주요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참여를 전제로 이사회 및 사무국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3) 후기: 국제사회의 다자간 협력 심화 유도 및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추진

후기는 북한이 다자간 협력을 심화시켜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과 같은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 장형수, 김석진, 임을출(2012)의 연구에 의하면 이 시기에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와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의 양자 원조공여기관 등과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을 수립해 실행한 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본격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후기 경제외교 지원 시에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선도하기 위한 북한의 '국가지원전략'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중기에 수립하는 가칭 '북한개발지원그룹'을 확대 개편하여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과거 20년간 우리 정부가 주장한 '동북아개발은행'[63]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윤덕룡(200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적극적인 개혁의지가 보이지 않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승인 없이 북한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의 일종으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제안된 지 무려 20년이나 경과된 지금에도 현실화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이나 일

63) 장형수(2008), pp. 322~323: "동북아개발은행 논의에 대해 과거 동북아 지역에 대한 개발금융 수요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이 이 지역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융자가 미비하므로 동북아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은행을 창설하여 직접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로 시작하였으나 이를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자금 조달창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논의의 초점이 약간 바뀌었다"라고 언급하였다.

본 등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지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북한의 경제성장 후기에 제도통합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산업고도화를 지원해야 하는 시기로 국제사회의 여건들이 충분히 조성된 후, 좀 더 발전적인 동북아 경제협력을 우리 정부가 주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북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연계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8장 결 론

1. 연구 결과와 현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비교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국가 및 체제전환국의 특징을 함께 가진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개혁 및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의 시퀀싱과 타이밍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기초로 우리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먼저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기조와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현재의 대북 정책의 적실성을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이 연구 결과의 현실적인 수용가능성을 평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 연구가 경제성장 결정요인에만 근거하고 있고 대북 정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안보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 정부의 주요 대북 정책기조를 나타내는 정책들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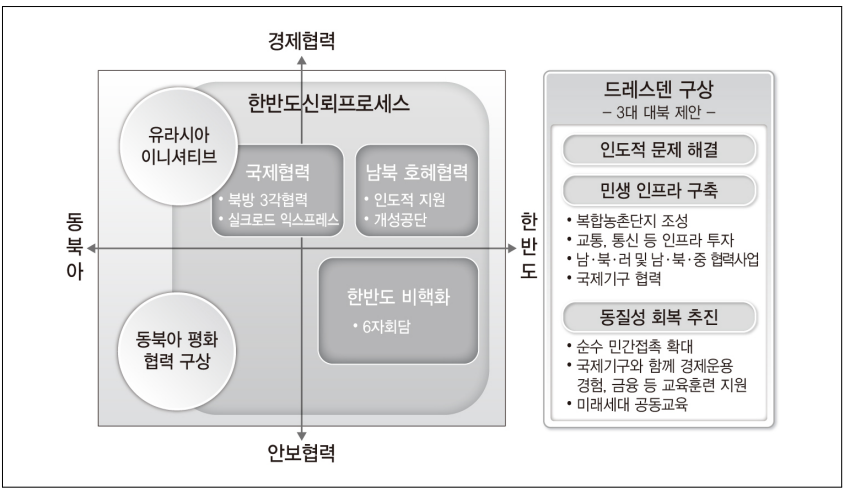
첫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 남북 동질성 회복과 호혜협력 추진) 가동, 둘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셋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넷째, 위의 세 가지 정책기조를 종합해 실행가능한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대북 제안을 이끌어낸 드레스덴 구상이다.

이와 같은 4대 정책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세로축은 협력방향(경제 또는 안보)에 따라 구분하고 가로축은 협력범위(한반도 또는 동북아)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난 결과가 [그림 8-1]이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 등을 통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잘 드러나 있고, 이를 동북아 경제협력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은 '유라시아 이니셔티

브', 동북아 안보협력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다. 드레스덴 구상은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북 제안(첫째, 인도적 문제 해결, 둘째, 민생 인프라 구축, 셋째, 동질성 회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8-1]에서는 [표 7-1]에서 제시한 우리 정부의 지원방안을 정책 순차성 없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어 현 정부의 대북 정책방향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 결과의 수용가능성이 낮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정리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드레스덴 선언)을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적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우선 국제기구와 함께 경제 운영경험을 전수하고 금융 등의 교육훈련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방향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그림 8-1.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자료: 외교부(2014); 통일부(2014)를 기초로 저자 재구성.

있다. 그러나 미래세대에 대한 공동교육은 현 시점에서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고 그 실현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북한주민의 영양개선 지원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역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경제성장의 주요 결정요인이었다. 복합농촌단지 조성은 본 연구에서도 제안했듯이 북한의 성장기반 조성 차원에서도 바르게 설정된 정책목표이다. 남 · 북 · 러 나진 · 하산 물류투자사업 참여와 같은 남 · 북 · 러 북방 3각협력사업 역시 성장 결정요인으로 유효했던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 협력정책의 상징인 드레스덴 선언은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때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정된 정책제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안보적 선결과제의 해결이 정책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2. 연구의 성과 및 한계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협력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체제전환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표 5-1], [표 6-3], [표 7-1]에서 핵심적 사항들을 성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특징, 성과, 그리고 한계를 정리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저소득국뿐만 아니라 체제전환국의 경

제성장 결정요인을 동시에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북한 경제성장의 순차적 성장방향을 시기별로 제시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그 발전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북 경제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동안 북한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 학술적, 이론적 논거가 부족한 채 정책이 제안되거나 입안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도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도출된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 역시 정책의 시퀀싱과 타이밍을 함께 고려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들과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다.

둘째,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것은 북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각각 독립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바 있으나, 북한과 관련된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본 연구와 같이 다방면의 시각에서 분석한 것은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학술적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소득수준별, 체제이행국가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을 표준적인 경제성장 추정식하에서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문헌과 다르다. 더욱이 본 연구는 실증분석에서 고정효과와 시스템 GMM을 사용함으로써 추정방법의 강고성을 제고하였다.

넷째,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요인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체제이행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의 순차성을

분석, 제안하였다. 아울러 제6장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이론 및 체제전환 연구들과 비교함으로써 실증연구의 정합성을 높였다.

앞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특징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는 없었다. 경제성장 결정요인은 전통경제학에서도 다양한 변수로 분석된다. 다만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고, 그 중에서도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변수만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향후 본 연구가 북한의 경제성장 관련 정책연구에 훌륭한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김석진. 2012.「북한산업의 발전 잠재력과 정책과제」. 김두얼 편. 2012.『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장기발전전략』. 한국개발연구원.

김병연 · 양문수. 2012.「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대출판문화원.

김병연 · 정승호. 2014.「중국의 대북한 거래 기업 분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과제 보고서.

『노동신문』. 2013.「질 제고에서 경제적 공간의 효과적 이용」. (7월 14일)

민병원 · 조동준 · 김치욱. 2010.『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통일연구원.

박명규 · 김병로 · 김병연 · 박정란 · 이근관 · 전재성 · 정은미 · 황지환. 2010.「연성복합통일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서울대 출판부.

박형중. 2003.「'선군시대' 북한의 경제정책: 2002년 7월 조치 이후 9월의 '중공업 우선 발전'론의 대두」.『아세아연구』, 제46권 제2호 통권112호, pp. 11~32.

양문수 · 이석기 · 이영훈 · 임강택 · 조봉현. 2012.「2000년대 북한경제 종합평가」. 정책자료 2012-182. 산업연구원.

『연합뉴스』. 2013.「북한, 기업 독립채산제 전환 가속화」. (10월 10일)

_____. 2014.「北 상반기 결산··· 정치는 '변화', 경제는 '연속'」. (6월 29일)

외교부. 2014.「희망의 새시대 평화통일 신뢰외교를 위한 2014년 외교부 업무보고」.

이상준. 2012.「북한의 경제발전과 기반시설 개발과제」. 김두얼 편.『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장기발전전략』. 한국개발연구원.

이석기 · 김석진 · 김계환. 2010.「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 회복 실태와 작동방식」. 산업연구원.

임강택 · 김규륜 · 박영호 · 전병곤 · 이조원. 2008.「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08-08-03. 서울: 통일연구원.

윤덕룡. 2005.「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통일연구원 개원 기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서울: 통일연구원.

정형곤. 2001.『체제전환의 경제학』. 청암미디어.
_____. 2002.「제도개혁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중국과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을 중심으로」.『제도연구』. 한국경제연구원.
_____. 2003.「동유럽의 경제개혁과 북한」.『현대북한연구』.
정형곤 · 김병언 · 이 석. 2012.『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 김지연 · 이종운 · 홍익표. 2011.『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형수. 2008.「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재원조달 방안을 중심으로」.『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pp. 315~338. 서울: 통일연구원.
장형수 · 김석진 · 임을출. 2012.「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12-11-03. 서울: 통일연구원.
조동호 · 박진 · 정연호 · 신지호 · 김현종 · 김은영. 2002.『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조선신보』. 2013a.「《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 연구완성을」. (5월 15일)
_____. 2013b.「신의주 시에 특수경제지대, 도들에 13개 경제개발구」. (11월 27일)
_____. 2013c.「조선 각지에 13개의 경제개발구창설」. (12월 4일)
_____. 2013d.「사회주의 원칙 고수, 국가의 통일적 지도」. (5월 15일)
통일부. 2014.「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2014년 통일부 업무보고」.
통일부 홈페이지.「대통령,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발표(드레스덴)」.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56&mode=view&cid=11861 (검색일: 2014. 4. 15).

[외국문자료]

Acemoglu, D., P. Aghion and F. Zilibotti. 2006. “Distance to Frontier, Selection,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 4, pp. 37-74.

Acemoglu, D., S. Johnson and J. A. Robinson. 2001.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1(5), pp. 1369-1401.

_____. 2002. "Reversal of Fortune: Geography and Institutions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Income Distribu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7, pp. 1231-1294.

Ang, James B. 2013. "Institutions and the Long-run Impact of Early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105, pp. 1-18.

Arellano, M. and O. Bover. 1995. "Another Look at the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of Error Components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Vol. 68, pp. 29-52.

Barlow, D. and R. Radulescu. 2005. "The Sequencing of Reform in Transition Economi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 pp. 835-850.

Barro, R. J. 1991.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2), pp. 407-443.

_____. 1996.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Empirical Study." NBER Working Paper No. 5698.

_____. 2003.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in a Panel of Countries." *Annals of Economics and Finance,* Vol. (4), pp. 231-274.

Barro, R. J. and J. W. Lee. 1994. "Sources of Economic Growth."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_____. 2010. "A New Data Set of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World: 1950~2010." NBER Working Paper No. 15902.

Barro, R. J. and Xavier Sala-i-Martin. 2004. *Economic Growth, Second Edition.* New York: McGraw-Hill.

Blundell, R. W. and S. R. Bond. 1998. "Initial Conditions and Moment Restrictions in Dynamic Panel Data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Vol. 87, No. 1, pp. 115-143.

Bond, S., A. Hoeffler and J. Temple. 2001. “GMM Estimation of Empirical Growth Models.” University of Bristol Discussion Paper No. 01/525. http://bris.ac.uk/Depts/Economics/research/pdffiles/dp01525.pdf(검색일: 2014. 4. 7).

Boycko, Shliefer and Vishny. 1996. “A Theory of Privatisation.” *The Economic Journal,* Vol. 106, No. 435, pp. 309-319. (March)

Brauw, A., J. Huang and S. Rozelle. 2004. “The Sequencing of Reform Policies in China’s Agricultural Transition.” *Economics of Transition,* Vol. 12, pp. 427-465.

Brus, W. and K. Laski. 1989. “From Marx to the Market: Socialism in Search of an Economic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Butkiewicz, James L. and Halit Yanikkaya. 2011. “Institutions and the Impact of Government Spending on Growth.” *Journal of Applied Economics,* Vol. 14(2), pp. 319-341.

Canning, D. and Peter Pedroni. 2008. “Infrastructure, Long-run Economic Growth and Causality Tests for Cointegrated Panels.” The Manchester School (Special Issue), Vol. 76, pp. 504-527.

Carvalho, Antonio, Matthew Cable, Rabindra Nepal and Tooraj Jamasb. 2013. “Market-Oriented Structural Reforms and Human Development: Evidence from Transition Economies.” School of Economics Discussion Paper Series 493.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Caselli, F., G. Esquivel and F. Lefort. 1996. “Reopening the Convergence Debate: a New Look at Cross-Country Growth Empirics.”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1, pp. 363-389.

Choe, J. I. 2003. “Do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ross Domestic Investment Promote Economic Growth?”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7(1), pp. 44-57.

Chong, Alberto and C. Calderon. 2000. “Causality and Feedback Between

Institutional Measures and Economic Growth." *Economic & Politics,* Vol. 12(1), pp. 69-81.

De Long, J. B. and Lawrence H. Summers. 1991. "Equipment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2), pp. 445-502.

De Mello, L. R. 1997.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nd Growth: A Selective Survey."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34(1), pp. 1-34.

De Melo, Martha, Cevdet Denizer and Alan Gelb. 1996. "Patterns of Transition from Plan to Market."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0(3), pp. 397-424.

De Melo, Martha, Cevdet Denizer, Alan Gelb and Stoyan Tenev. 2001. "Circumstance and Choice: The Role of Initial Conditions and Policies in Transition Economie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5(1), pp. 1-31.

Dewatripont, M. and G. Roland. 1992. "The Virtues of Gradualism and Legitimacy in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Economic Journal,* Vol. 102, No. 411, pp. 291-300.

_____. 1996. "Transition as a Process of Large-Scale Institutional Change." *Economics of Transition,* Vol. 4, No. 1, pp. 1-30.

Dornetshumer, Elizabeth. 2007. "System GMM Estimation of Empirical Growth Models," pp. 1-6. Mimeo.

Driffill, John, E. Mizon Grayham and Ulph Alistair. 1990. "Costs of inflation." *Handbook of Monetary Economics*.

Durlauf, S. N., Paul A. Johnson and Jonathan R. W. Temple. 2005. "Growth Econometrics." *Handbook of Economic Growth,* pp. 555-677.

Easterly, W. and Ross Levine. 2001. "It's Not Factor Accumulation: Stylized Facts and Growth Models."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5(2), pp.

177-219.

Esfahani, Hadi Salehi and Maria Teresa Ramirez. 2003. “Institutions, Infra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70, pp. 443-477.

EBRD Economic Data Database[online]. http://www.ebrd.com/pages/research/economics/data(검색일: 2014. 4. 11).

Falcetti, Elisabetta, Martin Raiser and Peter Sanfey. 2002. “Defying the Odds: Initial Conditions, Reforms, and Growth in the First Decade of Transitio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0, pp. 229-437.

Falcetti, Elisabetta, Tatiana Lysenko and Peter Sanfey. 2006. “Reforms and Growth in Transition: Re-examining the Evidenc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4, pp. 421-445.

Fernandez, R. and D. Rodrik. 1991. “Resistance to Reform: Status Quo Bias in Presence of Individual-specific Uncertainty.” *American Economic Review.*

Fidrmuc, Jarko. 2003. “Economic Reform, Democracy and Growth During Post-communist Transi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9, pp. 583-604.

Fischer, S., R. Sahay and C. Vegh. 1998. “From Transition to Market: Evidence and Growth Prospects.” IMF Working Paper WP/98/52.

Flachaire, Emmanuel, Cecilia García-Peñalosa and Maty Konte. 2014. “Political versus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Growth Proces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42, pp. 212-229.

Grossman, G. and E. Helpman. 1991. *Innovation and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MIT Press.

Hall, R. E. and C. I. Jones. 1999. “Why Do Some Countries Produce So Much More Output per Worker than Othe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4(1), pp. 83-116. (February)

Hausmann, Ricardo, Lant Pritchett and Dani Rodrik. 2005. “Growth Accelerations.”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10(4), pp. 303-329.

Hausmann, Ricardo, Dani Rodrik and Andres Velasco. 2005. "Growth Diagnostics." Mimeo.

Havrylyshyn, O., I. Izvorski and R. van Rooden. 1998. "Recovery and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1990-97." IMF Working Paper No. 98/141.

Islam, N. 1995. "Growth Empirics: a Panel Data Approac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0, pp. 1127-1170.

Jeong, Hyung-Gon. 2013. "Initial Conditions, Economic Performance, and Reform Prospects in North Korea."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26, No. 4.

Katerina, Lyroudi, Papanastasiou John and Vamvakidis Athanasios. 2004.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South Eastern Europe Journal of Economics,* Vol. 1, pp. 97-110.

Kaufmann, Daniel, Aart Kraay and Massimo Mastruzzi. 2003. "Governance Matters III: Governance Indicators for 1996-2002."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106.

Keefer, Philip and Stephen Knack. 1997. "Why don't Poor Countries Catch up? A Cross-national Test of an Institutional Explanation." *Economic Enquiry*, Vol. 35, pp. 590-602.

Kim, Byung-Yeon, and Jukka Pirtilla. 2006.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s: Empirical Evidence from Post Communist Transition in the 1990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4, pp. 446-466.

Kim, Byung-Yeon. 2002. "Causes of Repressed Inflation in the Soviet Consumer Market: Retail Price Subsidies, the Siphoning Effect, and the Budget Deficit." *The Economic History Review*, Vol. 55, No. 1, pp. 105-127.

_____. 2003. "Informal Economy Activities of Soviet Households: Size and Dynamic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1, No. 3, pp. 532-551.

King, R. and R. Levine. 1993. "Finance and Growth: Schumpeter Might be

Righ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8, No. 3, pp. 717-737.

Knack, S. and P. Keefer. 1995.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ross-Country Tests Using Alternative Institutional Measures." *Economics and Politics*, Vol. 7, pp. 207-227. (November)

Kornai, J. 1986a. "The Hungarian Reform Process: Visions, Hopes and Real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24, pp. 1687-1737.

_____. 1986b. *The Soft Budget Constraint*, Vol. 39. Issue 1, pp. 3-30. (February)

_____. 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Oxford University Press.

Krueger, Anne O. 1978. "Foreign Trade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Liberalization Attempts and Consequences." Lexington, MA: Ballinger Press.

Kurtz, Marcus. J. and Andrew Schrank. 2007. "Growth and Governance: A Defense."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9(2), pp. 563-569.

Lau, L., Y. Qian and G. Roland 2000. "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 track Approach to Transi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8, pp. 121-143.

Lawson, Colin and Haifeng Wang. 2004. "Economic Transi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Which Policies Worked?" Working Paper. University of Bath, Department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Lee, Jong-Wha. 1993. "International Trade, Distortions, and Long-Run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aff Papers*, Vol. 40(2), pp. 299-328.

Lee, Keun and Byung-Yeon Kim. 2009. "Both Institutions and Policies Matter but Differently for Different Income Groups of Countries: Determinants of Long-Run Economic Growth Revisited." *World Development*, Vol. 37, Issue 3, pp. 533-549.

Lee, Young-sun and Hyung-Gon Jeong. 2006.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of Transition Economies: Economic Reform vs. Initial Condition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 20(2), pp. 241-252.

Lensink, Robert and Oliver Morrissey. 2006. "Foreign Direct Investment: Flows, Volatility, and the Impact on Growth."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4(3), pp. 478-493.

Lewis, W. A. 1955.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London: Allen & Unwin.

Levine, R. 1997.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Views and Agenda."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5, pp. 688-726.

_____. 2004. "Finance and Growth: Theory and Evidence." NBER Working Paper, No. 10766.

Levine, R. and David Renelt. 1992. "A Sensitivity Analysis of Cross-Country Growth Regression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2(4), pp. 942-963.

Lucas, R. 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22, pp. 3-42.

Mankiw, N. G., David Romer and David N. Weil. 1992.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7, pp. 407-437.

Mauro, P. 1995. "Corruption and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0(3), pp. 681-712. (August)

Moral-Benito, Enrique. 2012.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 Bayesian Panel Data Approach."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4(2), pp. 566-579.

Murphy, K., A. Shleifer and R. Vishny. 1992.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p. 889-906.

Murrel, P. 1995. "The Transition According to Cambridge, Mas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3.

Naughton, Barry. 1996.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93.” Cambridge University Press.

Nickell, S. 1981. “Biases in Dynamic Models with Fixed Effects.” *Econometric*, Vol. 49, No. 6, pp. 1417-1426.

Nkurunziza, J. D., and R. H. Bates. 2003.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 No. 98. Harvard University.

North, Douglass. 1971.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Growth.”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31, No. 1, pp. 118-125.

_____.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orth, Douglass and Robert Thomas. 1973.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OECD. 2003.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OECD Countrie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enn World Table(PWT) version 8.0[online], http://www.rug.nl/research/ggdc/data/penn-world-table(검색일: 2014. 3. 19).

Petrakos, G., Paschalis Arvanitidis and Sotiris Pavleas. 2007.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The Experts’ View.” Working Papers. DYNREG.

Phillips, Peter C. B. and Donggyu Sul. 2003. “The Elusive Empirical Shadow of Growth Convergence.” Cowles Foundation Discussion Paper 1398. Cowles Foundation for Research in Economics, Yale University.

Plossner, C. 1992. “The Search for Growth.” *Policies for Long-run Economic Growth.*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Podrecca, E. and G. Carmeci. 2001. “Fixed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New Results on Causality.” *Applied Economics*, Vol. 33, pp. 177-182.

Portes, R. and D. Winter. 1980. “Disequilibrium Estimates for Consumption Goods Markets in Centrally Planned Economi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47, pp. 137-159.

Portes, R., R. Quandt and S. Yeo. 1988. "Tests of the Chronic Shortage Hypothesis: The Case of Poland."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2, 70, pp. 288-295.

Pugel, Thomas. 2007. *International Economics*. New York: McGraw-Hill Irwin.

Radulescu, Roxana and David Barlow.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ies and Growth in Transition Countries." *Economics of Transition*, Vol. 10(3), pp. 719-745.

Rodriguez, Francisco and Dani Rodrik. 2001. "Trade Policy and Economic Growth: A Skeptic's Guide to the Cross-National Evidence." *NBER Macroeconomics Annual 2000*, Vol. 15, pp. 261-338.

Rodrik, Dani. 1995. "Trade and Industrial Policy Reform." J. Behrman and T. N. Srinivasan eds.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3. Elsevier Science.

_____. 2000. "Institutions for High-Quality Growth: What they are and How to Acquire them."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35, No. 3, pp. 3-31.

Rodrik, D., A. Subramanian and F. Trebbi. 2004. "Institutions Rule: The Primacy of Institutions Over Geography and Integr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9, No. 2, pp. 131-165.

Roland, Gerard. 2000. "Transition and Economics: Politics, Markets, and Firms." MIT Press.

Romer, Paul. 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9, pp. 500-521.

_____. 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pp. S71-S102.

Sachs, J. D. 1996. "The Transition at Mid Decad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6(2), pp. 128-133.

Sachs, J. D. and A. Warner. 1995. “Economic Reform and the Process of Global Integra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26, No. 1, pp. 1-118.

Sala-i-Martin, Xavier, Gernot Doppelhofer, and Ronald Miller. 2004. “Determinants of Long-Term Growth: A Bayesian Averaging of Classical Estimates(BACE) Approach.”

Sanchez-Robles, Blanca. 1998.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Growth: Some Empirical Evidence.”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Vol. 16(1), pp. 98-108.

Selowsky, Marcelo and Ricardo Martin. 1997. “Policy Performance and Output Growth in the Transition Economie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87(2), pp. 349-353.

Solow, Robert. 1956.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70, No. 1, pp. 65-94.

Staehr, K. 2005. “Reforms and Economic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Complementarity, Sequencing and Speed.” *Europea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2, pp. 177-202.

Weitzman, M. 1980. “The Ratchet Principle and Performance Incentives.” *Bell Journal of Economics*, pp. 302-308.

Wooldridge, Jeffrey M. 2002.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The MIT Press.

World Bank. Country Classification[online]. https://datahelpdesk.worldbank.org/knowledgebase/articles/378833-how-are-the-income-group-thresholds-determined (검색일: 2014. 3. 10).

_____. World Development Indicators[online].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variableSelection/selectvariable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14. 3. 13).

_____.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online].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index.aspx#home(검색일: 2014. 3. 18).

부 록

부표 1. 전체 분석대상국

(125개국)

Albani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 Bahrain, Bangladesh, Barbados, Belgium, Belize, Benin, Bolivia, Botswana, Brazil, Brunei, Bulgaria, Burundi, Cambodia,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 Chile, China, Colombia, Congo Rep., Costa Rica, Cote d'Ivoire, Croatia, Cyprus, Czech Rep., Denmark, Dominican Rep., Ecuador, El Salvador, Estonia, Fiji, Finland, France, Gabon, Germany, Ghana, Greece, Guatemala, Honduras, Hong Kong,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an, Ireland, Israel, Italy, Jamaica, Japan, Jordan, Kazakhstan, Kenya, Korea Rep., Kuwait, Kyrgyzstan, Laos, Latvia, Lesotho, Liberia, Lithuania, Luxembourg, Macao, Malawi, Malaysia, Mali, Malta, Mauritania, Mauritius, Mexico, Moldova, Mongolia, Morocco, Mozambique, Namibia,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ger, Norway, Pakistan, Panam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atar, Russia, Rwanda, Saudi Arabia, Senegal, Serbia,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 Rep.,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waziland, Sweden, Switzerland, Syria, Tajikistan, Tanzania, Thailand, Togo, Trinidad & Tobago, Tunisia, Turkey, Ugand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 Venezuela, Vietnam, Yemen, Zambia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 OECD 회원국: 고소득국

(31개국)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Rep., Luxembourg,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자료: 저자 작성.

부표 3. 소득수준 4,000~1만 2,000달러 국가군

(30개국)

Albania, Armenia, Bulgaria, Belize, Brazil, Botswana, China, Colombia, Costa Rica, Dominican Rep., Ecuador, Gabon, Indonesia, Jamaica, Jordan, Kazakhstan, Sri Lanka, Mongolia, Mauritius, Namibia, Peru, Paraguay, Serbia, Swaziland, Syria, Thailand, Tunisia, Uruguay, Venezuela, South Africa.

자료: 저자 작성.

부표 4. 소득수준 1,000~4,000달러 국가군

(31개국)

Benin, Bangladesh, Bolivia, Cote d'Ivoire, Cameroon, Congo Rep., Fiji, Ghana, Guatemala, Honduras, India, Kenya, Kyrgyzstan, Cambodia, Laos, Lesotho, Morocco, Moldova, Mauritania, Nepal, Pakistan, Philippines, Rwanda, Sudan, Senegal, Tajikistan, Tanzania, Uganda, Vietnam, Yemen, Zambia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OECD 회원국

(인적자본: 취학률)

	(1)	(2)	(3)
전기의 1인당 GDP	-0.1831***	-0.1531***	-0.1108***
	(0.0254)	(0.0195)	(0.0258)
전기의 초등	0.3729*	-	-
	(0.1927)		
전기의 중등	-	0.2634***	-
		(0.0811)	
전기의 고등	-	-	0.0240**
			(0.0110)
국내투자	0.1382***	0.1912***	0.2616***
	(0.0201)	(0.0190)	(0.0303)
수출비중	0.0172	0.0241	0.0401
	(0.0179)	(0.0235)	(0.0263)
인프라	0.0168	0.0092	0.0281
	(0.0205)	(0.0285)	(0.0175)
인플레이션율	-0.0003	-0.0000	-0.0007
	(0.0007)	(0.0008)	(0.0010)
외국인직접투자	0.0504***	0.0541***	0.0279***
	(0.0075)	(0.0095)	(0.0088)
제도적 여건	0.0617***	0.0442***	0.0369***
	(0.0143)	(0.0085)	(0.0130)
기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AR (2)	-1.92	-1.91	-1.92
	[0.054]	[0.055]	[0.054]
Hansen	19.07	20.76	21.21
	[0.641]	[0.641]	[0.817]
표본 수	179	179	176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편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부표 6.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소득수준 4,000~1만 2,000달러

(인적자본: 취학률)

	(1)	(2)	(3)
전기의 1인당 GDP	-0.2809***	-0.2792***	-0.2946***
	(0.0980)	(0.0759)	(0.0897)
전기의 초등	0.1670	-	-
	(0.1645)		
전기의 중등	-	0.0333	-
		(0.1433)	
전기의 고등	-	-	0.0195
			(0.0383)
국내투자	0.1812***	0.1896**	0.1690***
	(0.0532)	(0.0785)	(0.0629)
수출비중	0.0530	0.0708*	0.0550
	(0.0371)	(0.0397)	(0.0416)
인프라	0.0656**	0.0553	0.0502
	(0.0282)	(0.0414)	(0.0450)
인플레이션율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외국인직접투자	-0.0248	-0.0179	-0.0221
	(0.0215)	(0.0179)	(0.0207)
제도적 여건	0.0597	0.0700	0.0662
	(0.0380)	(0.0448)	(0.0601)
기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AR (2)	-0.86	-1.24	-0.84
	[0.392]	[0.216]	[0.403
Hansen	31.42	28.34	33.05
	[0.832]	[0.916]	[0.774]
표본 수	227	224	194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편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부표 7.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소득수준 1,000~4,000달러

(인적자본: 취학률)

	(1)	(2)	(3)
전기의 1인당 GDP	-0.1137**	-0.1052	-0.0546
	(0.0532)	(0.0774)	(0.0476)
전기의 초등	0.0529	-	-
	(0.0571)		
전기의 중등	-	0.0253	-
		(0.0328)	
전기의 고등	-	-	-0.0149
			(0.0111)
국내투자	0.0900***	0.0460*	0.0974***
	(0.0236)	(0.0257)	(0.0195)
수출비중	0.0134**	0.0256*	0.0122***
	(0.0056)	(0.0151)	(0.0041)
인프라	0.0167	0.0065	-0.0255
	(0.0160)	(0.0302)	(0.0307)
인플레이션율	-0.0002	-0.0003	-0.0001
	(0.0004)	(0.0004)	(0.0003)
외국인직접투자	0.0081*	0.0128	0.0125***
	(0.0047)	(0.0123)	(0.0029)
제도적 여건	-0.0054	0.0019	0.0156
	(0.0066)	(0.0206)	(0.0176)
기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AR (2)	-0.14	-0.55	0.08
	[0.892]	[0.584]	[0.936]
Hansen	21.73	16.76	14.99
	[0.476]	[0.471]	[0.862]
표본 수	199	186	191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편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부표 8. 체제전환국의 결정요인 분석: 시스템 GMM

(인적자본: 취학률)

	(1)			(2)		
	(1-1)	(1-2)	(1-3)	(2-1)	(2-2)	(2-3)
전기의 1인당 GDP	-0.3673***	-0.2678***	-0.3280***	-0.3190***	-0.2802***	-0.3130***
	(0.0335)	(0.0339)	(0.0395)	(0.0500)	(0.0603)	(0.0352)
전기의 초등	0.5130	-	-	0.4502	-	-
	(0.4206)			(0.5629)		
전기의 중등	-	0.7404*	-	-	0.8326**	-
		(0.3865)			(0.3564)	
전기의 고등	-	-	0.1435***			0.1628**
			(0.0453)	(0.0453)	(0.0453)	(0.0689)
국내투자	0.2553***	0.2521***	0.2891***	0.0969***	0.3130***	0.2357***
	(0.0371)	(0.0489)	(0.0365)	(0.0295)	(0.0452)	(0.0524)
수출비중	0.1824***	0.0673	0.0985**	0.1563***	0.0821	0.0790
	(0.0616)	(0.0750)	(0.0443)	(0.0501)	(0.0537)	(0.0542)
인플레이션율	-0.0002***	-0.0003***	-0.0002***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0)	(0.0000)	(0.0000)	(0.0000)
인프라	0.1781***	0.1093***	0.1157**	0.3459***	0.0402	0.0750
	(0.0462)	(0.0412)	(0.0454)	(0.0908)	(0.0661)	(0.0938)
외국인직접투자	0.0032	0.0474**	0.0065	-0.0050	-0.0103	-0.0302
	(0.0199)	(0.0209)	(0.0168)	(0.0279)	(0.0167)	(0.0222)
대규모 사유화	0.0022	-0.0483*	-0.0029	-	-	-
	(0.0298)	(0.0262)	(0.0261)			
소규모 사유화	-	-	-	0.1463**	0.1609***	0.2039***
				(0.0647)	(0.0589)	(0.0359)
AR (2)	1.12	1.32	1.24	0.62	1.08	1.04
	[0.262]	[0.187]	[0.214]	[0.536]	[0.278]	[0.297]
Hansen	9.54	9.18	10.87	17.57	11.77	16.02
	[0.890]	[0.910]	[0.977]	[0.616]	[0.997]	[0.715]
N	115	117	119	115	117	119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편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부표 8. 계속

(인적자본: 취학률)

	(3)			(4)		
	(3-1)	(3-2)	(3-3)	(4-1)	(4-2)	(4-3)
전기의 1인당 GDP	-0.3230***	-0.3183***	-0.3877***	-0.3174***	-0.3975***	-0.4788***
	(0.0407)	(0.0428)	(0.0463)	(0.0326)	(0.0622)	(0.0784)
전기의 초등	0.2846	-	-	0.7262	-	-
	(0.2618)			(0.5241)		
전기의 중등	-	0.6578**	-	-	0.3814*	-
		(0.3178)			(0.2120)	
전기의 고등	-	-	0.1792***			0.1788*
			(0.0384)	(0.0384)	(0.0384)	(0.1058)
국내투자	0.2096***	0.3087***	0.2469***	0.2120***	0.2309***	0.2033***
	(0.0325)	(0.0521)	(0.0501)	(0.0329)	(0.0354)	(0.0468)
수출비중	0.0556*	-0.0025	0.0367	0.2113***	0.2374***	0.2588***
	(0.0335)	(0.0539)	(0.0796)	(0.0455)	(0.0364)	(0.0465)
인플레이션율	-0.0001	-0.0002***	-0.0002***	-0.0004***	-0.0001	-0.0002***
	(0.0001)	(0.0000)	(0.0001)	(0.0001)	(0.0001)	(0.0001)
인프라	0.1200***	0.1184***	0.2939***	0.0737**	0.0998*	0.1449**
	(0.0340)	(0.0308)	(0.0223)	(0.0371)	(0.0512)	(0.0638)
외국인직접투자	0.0608***	-0.0070	-0.0117	-0.0336	-0.0077	-0.0355
	(0.0174)	(0.0197)	(0.0088)	(0.0293)	(0.0252)	(0.0369)
거버넌스	0.1394***	0.1619***	0.0903**	-	-	-
	(0.0355)	(0.0444)	(0.0412)			
가격자유화	-	-	-	0.0093	0.1190	0.0286
				(0.1257)	(0.2011)	(0.1104)
AR (2)	0.96	0.85	1.09	1.38	1.15	1.78
	[0.335]	[0.394]	[0.274]	[0.168]	[0.250]	[0.075]
Hansen	14.72	14.00	14.60	13.69	7.96	7.23
	[0.397]	[0.598]	[0.481]	[0.549]	[0.950]	[0.613]
N	115	117	119	115	117	119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편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부표 8. 계속

(인적자본: 취학률)

	(5)			(6)		
	(5-1)	(5-2)	(5-3)	(6-1)	(6-2)	(6-3)
전기의 1인당 GDP	-0.4014***	-0.2427***	-0.3042***	-0.3908***	-0.2783***	-0.4209***
	(0.0462)	(0.0595)	(0.0396)	(0.0476)	(0.0558)	(0.0515)
전기의 초등	0.3583	-	-	0.4166	-	-
	(0.2410)			(0.4701)		
전기의 중등	-	0.2067	-	-	0.8824***	-
		(0.2717)			(0.2516)	
전기의 고등	-	-	0.1488***			0.3268***
			(0.0576)	(0.0576)	(0.0576)	(0.0868)
국내투자	0.1019***	0.2807***	0.2001***	0.2777***	0.2585***	0.2396***
	(0.0379)	(0.0561)	(0.0582)	(0.0573)	(0.0527)	(0.0204)
수출비중	0.1829***	0.1399***	0.0369	0.1163**	0.0201	0.0294
	(0.0664)	(0.0191)	(0.0471)	(0.0563)	(0.0337)	(0.0731)
인플레이션율	-0.0001***	-0.0003***	-0.0002***	-0.0002***	-0.0003***	-0.0003***
	(0.0001)	(0.0001)	(0.0000)	(0.0000)	(0.0001)	(0.0001)
인프라	0.3057***	0.0437	0.2060***	0.1273*	0.1782**	0.1756***
	(0.0721)	(0.0439)	(0.0671)	(0.0730)	(0.0735)	(0.0426)
외국인직접투자	-0.0081	-0.0034	-0.0173	0.0016	0.0454*	-0.0315
	(0.0149)	(0.0157)	(0.0214)	(0.0279)	(0.0263)	(0.0232)
무역 · 외환 시스템	0.0527	0.0556	0.1144**			-
	(0.0512)	(0.0436)	(0.0502)	(0.0502)	(0.0502)	
경쟁정책	-	-	-	0.0995	-0.0765	0.0814
				(0.0673)	(0.1078)	(0.0591)
AR (2)	0.67	1.02	0.50	1.24	0.63	1.28
	[0.502]	[0.308]	[0.618]	[0.213]	[0.528]	[0.202]
Hansen	14.92	12.11	13.64	10.20	10.86	11.82
	[0.531]	[0.598]	[0.914]	[0.807]	[0.818]	[0.692]
N	115	117	119	115	117	119

주: * p<0.10, ** p<0.05, *** p<0.01를 의미하고, ( ) 안은 표준편차, [ ] 안은 p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자료: 저자 작성.

Executive Summary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Their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Hyung-Gon Jeong, Byung-Yeon Kim, Jae Wan Lee,
Ho-Kyung Bang, and Yi Kyung Hong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the North Korean regime has placed greater emphasis on the economy, adopting the policy line of "Simultaneous development of Economy and nuclear weapons capability" in 2013. North Korea has promoted the "Measures for Our Way of Economic Improvement"(so-called June 28th measures) since 2012 with the aim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its economic operation. In addition, the Kim Jong-un regime newly designated 19 special economic zones in an attempt to attract more foreign investment and has not suppressed the market despite changes at home and abroad. Partly boosted by these efforts, North Korea's economy is reportedly improving in recent years. However, there are few signs of a rapid economic growth that North Korea is so eager to achieve. This is attributable to North Korea's system itself,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acting as a primary constraint to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For North Korea's robust economic growth, economic reforms within the system are not sufficient, but rather the country should move forward towards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for North Korea and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for its successful transition.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of transition economies as well as countries by income level. Based on the analysis,

it deduced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for North Korea.

In this study, variables such as infrastructure, institutional conditions, human capital, domestic investment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variables for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along with several transition-related variables such as privatisatio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rade/foreign exchange system. The policies which simultaneously affect all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re not feasible, and are likely to put a greater burden on the country bot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policies along with timing and sequencing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through analysis of examples from transition economies.

The study proposes policies that can successfully eliminate fundamental barriers to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providing greater economic boost but reducing the possibility of shocks for the country. By conducting theoretical analysis for the socialist economies in addition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seeks to improve the coherence of the empirical study.

This study presents policies by period, dividing the periods into short term, mid term and long term. In the short term, North Korea should set out to introduce small-scale privatisation on its own along with price liberal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offer help with respect to improvement of the impoverished country's essential infrastructure and nutritional/dietary conditions of its population. For the mid and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regarding improvement of trade and foreign exchange systems, large-scale privatisatio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competitiveness. During the process of adopting these policies, the assist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indispensable.

Policies regarding North Korea have often been suggested without firm academic evidence. Against this backdrop,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provide evidence which can help empirically evaluate economic policies of North Korea.

This study is distinguish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is issue in that it also suggests inter-Korean cooperation policies on the par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sidering both sequencing and timing.

Unfortunately, this study was not able to consider all variables regarding economic growth. Instead, it chose variables that can be applied to policies and of which relevant data were accessible. Despite such limitations, this research can hopefully become a stepping stone for further policy research on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4년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 · 김수빈 · 강삼모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 · 금혜윤 · 유새별 · 김양희 · 김한성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 · 김민성 · 송백훈 · 이창수

14-07 TPP 주요국 투자 및 서비스 장벽 분석: 협정문 및 양허 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 · 강준구 · 엄준현 · 이주미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 · 김혁황 · 이준원 · 박지현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 · 박혜리 · 엄준현 · 선주연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이성희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 · 최보영 · 이보람 · 이민영

14-12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 · 권 율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이신애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 · 최필수 · 나수엽 · 이효진 · 이장규 · 박민숙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 · 박진희 · 김홍원 · 이형근 · 최지원 · 張 博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노수연 · 정지현 · 강준구 · 오종혁 · 김홍원 · 이한나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윤아 · 이 웅 · 김유미 · 박나리 · 신민금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곽성일 · 배찬권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이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웅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정미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 · 한민수 · 김종혁 · 이성희 · 고희채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14-23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제성훈 · 민지영 · 강부균 · Sergey Lukonin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 · 김예진 · 장종문 · 권유경

■ 2013년

13-01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최낙균 · 김영귀

13-02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 이동은 · 양다영 · 강은정 · 박영준

13-03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 정 철 · 이준원 · 김봉근 · 전영준

13-04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윤덕룡 · 송치영 · 김태준 · 문우식 · 유재원 · 채희율

13-05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배찬권 · 금혜윤

13-06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 서진교 · 오수현 · 박지현 · 김민성 · 이창수

13-07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이동은 · 강은정 · 편주현 · 안지연

13-08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이승래 · 김혁황 · 강준구

13-09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 배찬권 · 선주연 · 김정곤 · 이주미

13-10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 문진영 · 김보민 · 이성희 · 김윤옥 · 홍이경 · 이민영

13-11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지원 · 서정민 · 문진영 · 송지혜

13-12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 정 철 · 박순찬 · 박인원 · 임경수

13-13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정여천 · 제성훈 · 강부균 · 최필수 · 김부용 · 김지연

13-14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문익준 · 이혁구 · 전재욱

13-15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조영관 · 엄구호 · 강명구

13-16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 정형곤 · 이유진 · 안병민

13-17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
양평섭 · 나수엽 · 남수중 · 이상훈 · 이혁구 · 유호림 · 조현준 · 최의현 · 장영석

13-18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
문익준 · 정지현 · 나수엽 · 박현정 · 이효진

13-19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
최필수 · 박영호 · 권기수 · 정재완 · 이효진

13-20 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문익준 · 양다영 · 허 인

13-21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
양평섭 · 정지현 · 노수연 · 김부용 · 박현정 · 임민경 · 오종혁 · 김홍원 · 박진희 · 이상희

13-22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
김태윤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금 · 박나리 · 김유미

13-23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서영경

13-24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
강유덕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김준엽

13-25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이 웅 · 송영철 · 초충제 · 최윤정

13-26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 이권형 · 곽성일 · 박재은 · 손성현

13-27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 박영호 · 장종문 · 전혜린 · 김영기

13-28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임태균

■ 2012년

12-01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한진희

12-02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 김준동 · 서진교 · 송백훈 · 안덕근

12-03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배찬권 · 김정곤 · 금혜윤 · 장용준

12-04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 서진교 · 정 철 · 이준원 · 정윤선

12-05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김영귀 · 김종덕 · 강준구 · 김혁황

12-06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 Sherzod Shadikhodjaev · 서정민 · 김민성 · 이재형

12-07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 서정민 · 정지원 · 박혜리 · 조명환

12-08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12-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이동은 · 편주현 · 양다영

12-10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헷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박은선 · 강삼모

12-11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안지연 · 이동은 · 박영준 · 강은정

12-1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 강유덕 · 김균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12-13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 / 이창재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12-14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권 율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12-15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12-16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
최필수 · 이상훈 · 문익준 · 나수엽

12-17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
문익준 · 박민숙 · 나수엽 · 여지나 · 은종학

12-18 중국 · 대만 · 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
이승신 · 양평섭 · 문익준 · 노수연 · 정지현 · 여지나

12-19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 이재영 · 이성봉 · Alexey Kuznetsov · 민지영

12-20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
김태윤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금 · 박나리

12-21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오윤아 · 허재준 · 강대창 · 김유미 · 신민금

12-22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조충제 · 송영철 · 최윤정 · 이 웅 · 정혜원

12-23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2-24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
한바란 · 최필수 · 윤서영 · 손성현 · 박재은 · 전혜린 · 이시욱

12-25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 박영호 · 곽성일 · 전혜린 · 장종문

12-26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
정형곤 · 김병연 · 이 석

12-2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박복영 · 김종혁 · 고희채 · 박경로

12-2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정성춘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이우광

12-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
강유덕 · 김균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채희율

■ 2011년

11-01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 고희채 · 이준규 · 오민아 · 이보람

11-02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 이창재 · 방호경

11-03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 윤덕룡 · 오승환 · 백승관

11-04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 박복영 · 오승환 · 정용승 · 박영준

11-05 대외 위험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 이동은 · 강은정 · 박영준

11-06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11-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2권) / 박복영 편

11-08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종화 · 박영준 · 이형근 · 양다영

11-09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 서진교 · 이준원 · 김한호

11-10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 강유덕 · 이철원 · 이현진 · 오현정

11-11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 조미진 · 김영귀 · 박지현 · 강준하

11-12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11-13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강준구 · 김혁황 · 현혜정

11-1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 장용준 · 서정민 · 김민성 · 양주영

11-15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김정곤 · 박순찬

11-16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 김상겸 · 박인원 · 박순찬 · 임경수

11-17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
권 율 · 정지선 · 박수경 · 이주영

11-18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11-19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 정형곤 · 방호경 · 나승권 · 윤미경

11-20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
박월라 · Sherzod Shadikhodjaev · 나수엽 · 여지나 · 마 광

11-21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 경협 방향 /
정형곤 · 김지연 · 이종원 · 홍익표

11-22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 김태윤 · 이재호 · 정재완 · 백유진 · 강대창

11-23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
박영호 · 전혜린 · 김성남 · 김민희

11-24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고희채

11-25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11-26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 이재영 · Sherzod Shadikhodjaev · 박순찬 · 황지영

11-27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
이승신 · 최필수 · 김부용 · 여지나 · 박민숙 · 임민경

11-28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손승호

11-29 한국·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
강대창 · 김규판 · 오윤아 · 이재호 · 신민금 ·
Siwage Dharma Negara · Latif Adam

11-30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
김진오 · 권기수 · 고희채 · 박미숙 · 김형주

11-31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한바란 · 윤서영 · 박광순

정형곤(鄭衡坤)

독일 쾰른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現, E-mail: hgjeong@kiep.go.kr)

저서 및 논문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공저, 2011)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공저, 2012) 외

김병연(金炳椽)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現, E-mail: kimby@snu.ac.kr)

저서 및 논문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공저, 2012)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공저, 2012) 외

이재완(李宰琓)

영국 버밍엄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MB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現, E-mail: janyboy@kiep.go.kr)

방호경(方浩慶)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bassgu@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 · 중 · 일 3국 환경상품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분석을 중심으로』(공저, 2013)
『한 · 중 · 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비교우위 검토: 생산성 분석을 중심으로』(공저, 2013) 외

홍이경(洪梨境)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국제통상 전공)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現, E-mail: ykhong@kiep.go.kr)

저서 및 논문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공저, 2013)
『북 · 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공저, 2013) 외

연구보고서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2014년 11월 24일 인쇄
2014년 11월 28일 발행

발 행 인 이 일 형
발 행 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화: 044)414-1114 FAX: 044)414-1122,1199
인 쇄 경성문화사 전화 02)786-2999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487-0 94320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

절취선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2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Their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Hyung-Gon Jeong, Byung-Yeon Kim, Jae Wan Lee, Ho-Kyung Bang, and Yi Kyung Hong

본 연구는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순차적인 정책을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는 북한 정부가 소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를 주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며, 북한의 필수 인프라 개선과 주민의 영양상태 증진을 위해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 중기와 후기에는 무역 및 외환거래 시스템 개선, 대규모 사유화 과정에서 기업의 평가와 매각, 기업 구조조정, 경쟁촉진 정책 등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122, 1199
http://www.kiep.go.kr

9 788932 214870 94320
ISBN 978-89-322-1487-0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